



취약계층 건강과 먹거리 복지정책의 발전 방향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 결과 보고서

취약계층 건강과 먹거리 복지정책의
발전 방향을 위한 연구모임

발 간 사

안녕하십니까?

취약계층 건강과 먹거리 복지 정책의 발전 방향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 의원 이연희입니다.

본 연구모임은 충남 취약계층 주민들의 영양 불균형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먹거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되었습니다.

연구모임 회원들과 함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충남의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발굴을 위한 토론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 및 복지 정책 방안’ 연구용역을 병행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모임의 성과 및 별도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잘 결합하여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먹거리 지원 확대와 충남형 먹거리 복지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먹거리 기본 조례의 제·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이러한 노력이 작은 발걸음에 불과할지라도 ‘충남형 먹거리 복지정책 및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단단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아낌없는 후원과 지원을 해주신 충청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바쁜 일정에도 연구모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애써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이현숙 의원님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님들,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취약계층 건강과 먹거리 복지 정책의 발전방향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 이연희

목 차

I. 연구모임 사업계획	1
II. 연구모임 활동보고	7
III. 연구모임 결과 및 제언	35
* 부 록	45
-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기관 현황 및 개선사항 /	47
-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 및 복지정책 방안 연구 과업수행계획서 /	55
-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 및 복지정책 방안 연구 최종 보고 자료 /	67



연구모임 사업계획

「취약계층 건강과 먹거리 복지 정책의 발전방향을 위한 연구모임」사업계획

◆ 취약계층 주민들의 영양 불균형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먹거리 복지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1 연구모임 개요

1. 모 임 명 : 취약계층 건강과 먹거리 복지정책의 발전 방향을 위한 연구모임
2. 사업기간 : 2022년 8월 ~ 2022년 12월 (5개월)
3. 사업내용
 - 먹거리 복지정책 연구를 위한 워크숍 및 토론회 추진
 - 충남 지역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실태 조사
 - 협력적 거버넌스 위기 극복 방안 모색
 - 연구보고서(활동 결과 등) 발간 및 배포
4. 사 업 비 : 4,000천원

2 연구계획

1. 연구 논의
 - 내 용 : 연구모임 회원과의 회의 등
 - 방 법 : 모임 5회 진행(온라인 논의 병행)
 - 예 산 : 800천원(5회*160천원)

2. 현황 조사 및 분석

- 내 용 : 정부, 도, 지자체,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건강 및 먹거리 복지정책 조사 및 분석 실시,
충남 지역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실태 조사
- 방 법 : 지원 현황 조사 및 자료 분석
- 예 산 : 700천원(자료 수집, 분석 비용 등)

3.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 내 용 : 취약계층 건강과 먹거리 복지정책 발전 방향을 위한 연구
모임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 방 법 : 발제 및 토론 등
 - 관련 분야 전문가 주제 발제 진행
 - 자료 수집 및 분석 결과 보고
 - 토론자 토론 진행
- 예 산 : 1,400천원(700천원*2회,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 행사 부대 경비)

4. 최종 결과 보고 및 보고서 발간

- 내 용 : 조사 및 토론 등 연구결과 보고
- 방 법 : 연구보고서 발간 및 배포
 - 연구모임의 취지와 활동 결과 등 수록
 - 취약계층 건강과 먹거리 복지정책 및 제도 제안
 - 조례 제·개정 논의
- 예 산 : 1,100천원(최종 보고서 발간)

3 연구모임 추진 일정[안]

□ 연구모임 추진 일정안

(연구모임 : 8월~12월/5개월)						
세부내용	기간(개월)	소요월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 1차 모임 (발족식 등)						
나. 2차 모임 (연구용역 착수보고 등)						
다. 3차 모임 (연구용역 중간보고 등)						
라. 4차 모임 (연구용역 최종보고 등)						
마. 5차 모임 (연구모임 성과 공유 등)						

□ 연구용역 조사·연구 실시(2022년 9월 ~ 12월 중)

1. 과업 개요

가. 과업명 :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 및 복지정책 방안 연구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다. 사업예산 : 금19,266천원(계약 후 변경될 수 있음)

2. 과업 내용(추후 상세화 예정)

가. 충남 지역 취약계층 주민의 먹거리 실태조사

- 충남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300명을 임의 표집
- 성별, 연령 및 지역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설문 대상자 선정
- 먹거리의 접근성, 적절성 및 지속가능성에 기준으로 하여 조사내용을 추출하여 설문지 제작
- 설문조사를 통하여 먹거리 실태조사 분석 및 결과 종합

나. 충남의 먹거리 보장 사업의 실태 및 프로그램 평가

- 결식아동지원프로그램, 노인무료급식프로그램,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등

다. 국내외 문헌을 통한 먹거리 복지 선진지 사례 조사

- 영국의 푸드 정책, 미국 ‘제2의 수확(Second Harvest)’ 등
- 캐나다 토론토 시의 먹거리 정책
- 브라질의 벨로오리존찌(Belo Horizonte) 시의 먹거리 보장 정책

라. 취약계층을 위한 균형 있는 먹거리 복지 모델 제시

- 관련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FGI를 통한 먹거리 복지정책 개발

3. 활용 계획

- 본 연구의 충남도 먹거리 실태조사 및 국내외 사례조사 결과 등은 충남도와 시군의 먹거리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 본 연구는 먹거리 사업 실태 및 평가를 조사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추후 먹거리 사업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균형 있는 먹거리 복지모델은 충남도 및 시군의 먹거리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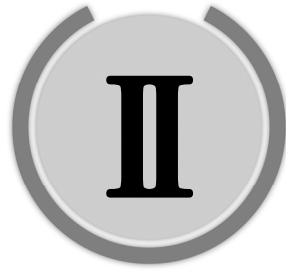
☐ 보고서 발간, 배포(2022년 12월 중)

- 연구모임 활동 결과, 정책발굴 및 제언 등

4 기대효과

☐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 안전 확보 및 결식 문제 해결

☐ 협력적 거버넌스 위기 극복 및 지자체 지원 확보



연구모임 활동보고

1. 연구모임 충청남도의회 등록

1. 모 임 명 : 취약계층 건강과 먹거리 복지정책의 발전 방향을 위한 연구모임
2. 대 표 자 : 이연희 의원
3. 연구목적 : 취약계층 주민들의 영양 불균형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먹거리 정책의 발전 방향 제시
4. 활동기간 : 2022년 8월 ~ 12월
5. 구 성 원 : 9명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 고
대 표	이연희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도의원
간 사	박두웅	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 서산 행복나눔푸드마켓 운영위원회	위원장
회 원	이현숙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도의원
회 원	김윤정	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교수
회 원	김택진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회 원	이상복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관장
회 원	한용옥	적십자 서산지구협의회	회장
회 원	김미영	대한노인회 서산지회	사무국장
회 원	이여란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II. 총평

□ 연구모임의 성과 및 의미

- 이번 연구모임은 설문조사 대상이 1,000명에 한정되어 있고, 조사 기간도 짧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함께 ‘먹거리 돌봄 서비스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 취약계층 먹거리 문제 해소는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절감,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
- 연구모임을 통해 제시된 먹거리 지원 서비스 문제의 해결방안들이 충남의 복지 정책과 제도로써 발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음.

□ 먹거리 기본권의 원칙 및 ‘먹거리 불안 해소’ 개념 제시

- ‘밥을 굶는다’는 개념에서 ‘굶을까봐 두렵다’라는 심리적 문제까지 들여다 보았으며,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인권 측면으로 접근해야 함.
-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 정책은 유통의 개념에서 ‘불안자 해소’ 즉, 복지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지원 서비스의 문제점 해소 방안 제시

-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안)에 먹거리 돌봄 개념 포함
- 먹거리 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여된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안)’ 구축 제시
- 취약계층 및 장애인 먹거리 긴급 돌봄 제도화 제안
- 공유부엌 설치, 이동 마켓 운영 제도화 제안
- 광역 단위의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돌봄 조례의 필요성 제시

Ⅲ. 연구모임 추진 사항

발족식 및 1차 회의

□ 개 요

- 일 시 :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14:00 ~ 16:00
- 장 소 : 서산시민센터 청년활력공간
- 참 석
 - 대표 : 이연희(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 간사 : 박두웅(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
 - 회원 : 김윤정(한서대 보건상담복지학과), 김택진(서산시자원봉사센터)
이상복(서산시장애인복지관), 한용옥(적십자서산지구협의회)
김미영(대한노인회서산지회), 이여란(서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회의 내용

- 연구모임 전체 일정 개요 및 과제 진행 토의
- 참가 회원별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현황 소개
 -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지원 현황(박두웅), 장애인복지관 지원 현황(이상복), 자원봉사센터 지원 현황(김택진), 적십자사 지원 현황(한용옥), 대한노인회 지원 현황(김미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현황(이여란) 소개

□ 회의 결과

- 8월 말까지 각 소속 단체 별 먹거리 복지 지원현황(지원대상, 규모), 운영 실태,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리포트를 작성할 계획임.
- 2차 모임에서는 각 단체별 리포트를 중심으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기로 함.
- 연구용역 조사에 FGI(전문가 그룹) 설문 인터뷰를 포함하기로 함.

취약계층 건강과 먹거리 복지정책의 발전 방향을 위한 연구모임(1차 회의록)

회의명	2022년 8월 16일 1차 모임		
일 시	2022년 8월 16일(화) 14 : 00 - 16 : 00	장 소	서산시민센터 청년활력공간
참석자	이연희 도의원(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대표) 박두웅(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 운영위원장, 간사) 김윤정(한서대 보건상담복지학과 교수) 김택진(서산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이상복(서산시장애인복지관, 관장) 한용옥(적십자서산지구협의회, 회장) 김미영(대한노인회서산지회, 사무국장) 이여란(서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모임 내용	1. 참석 회원 소개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현숙 위원님, 도의회 일정으로 불참 안내. - 이연희 대표외 7명 참석자 소개하다. 2. 이연희 대표 인사말씀 - 본 연구모임은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먹거리 지원에 관한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충남형 먹거리 복지 정책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모임의 효율성을 위해 연구모임 참석자를 서산시 권역으로 한정하였지만, 사례지역으로 삼아 연구용역에서는 충남권 전역에 대해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 모임활동은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5개월로 한다. - 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는 총 5회로 추진 예정이며, 12월에는 우리 연구모임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정책 발전 방향을 위한 연구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제언과 아이디어 제공에 연구모임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3. 회원 자기소개 및 상견례 - 참가자 전원 순서대로 각 단체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다.		

토의 내용 (자유 토론)	1. 박두용(간사) - 먹거리기본권은 나이, 성별, 경제력, 사회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받은 권리를 말한다. 과거 먹고사는 문제는 사적공간이었으나 지금은 국가, 행정 및 국민이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기본권이다. 서산시의 경우 기초수급생활보장 수급자 4400여명, 장애인 10,000명, 독거어르신 8,700여명, 기타 긴급지원, 한부모(1,234명),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먹거리 취약계층 대상자가 25,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4.27%에 달한다. 여기 객신 각 단체에서 케어하는 수가 4,000~5,000명 정도라 보면, 아직도 15,000여명이 먹거리 문제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이상복 장애인복지관장 - 서산시 장애인의 경우 10,000여명에 달한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식사를 위해 독거노인 반찬나눔, 사랑의 줌도리 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 단체급식소(75명 규모)를 개소했다. 무료로 하고 싶었으나 어느정도의 조절이 필요하여 한끼 1,000원을 받는다. 먹거리 문제와 관련 가장 시급한 문제는 움직일 수 없는 재가 장애인들이다. 서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나눔냉장고 설치 관련 논의를 했으나 어려움이 있다.(설치 비용 냉장, 냉동 포함 500만원 소요 예상) 재가장애인을 위해 200여명의 활동지원사가 있기 때문에 방문지원을 할 수 있다. 충남에서 천안, 아산, 다음으로 장애인의 많은 서산시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규모, 시설, 운영예산 모두 최하위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 김택진 자원봉사센터장 - 행정은 보편적 복지를,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제단체는 맞춤형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57,000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일정 부분 시 지원과 기업체 후원으로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을 운영하며, 코로나19로 인해 현재는 도시락 배달로 대체하고 있다. 또한 1달에 1회 80명에게 반찬봉사, 분기별로는 읍면동 거점센터에서 생필품 등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4. 한용옥 적십자회장 - 적십자에서는 매주 진지방에서 회원들이 모여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고 있다. 화재 및 수해 피해가 발생할 시 긴급지원에 나선다. 희망풍차 60명, 진지방 73명 대상자를 위해 반찬봉사를 매주 실천하고 있다. 또 읍면동 450여명의 적십자 회원들이 지역에서 별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

5. 김미영 노인회사무국장

-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해 노노케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460명의 인원이 1,000여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실제 현장을 방문하면 27만원 노인연금 중 15만원은 월세로 나머지 12만원으로 생활을 하는 어르신이 있다. 밖에서 보는 것도다 어려운 분들이 많다. 심지어 노인일자리 수당을 빼앗아 가는 자식들도 있다. 서산카리타스로부터 물품을 지원 받아 나누면서 취약계층 어르신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6. 이여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 서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5개 읍면동에 22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업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다. 맞춤형 보장협의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10읍면동에 나눔냉장고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현실을 보면 나눔냉장고 운영이 만만하지 않다. 지속적인 나눔문화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다. 자신만을 생각하여 더 많이 가져가려는 분들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나눔냉장고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덧붙혀 나눔냉장고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7. 김윤정 한서대 교수

- 연구중심 생활로 현장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다. 많은 얘기를 듣고 싶다. 연구모임 활동 계획을 보면 연구용역과 모임활동이 중복된다. 역할 분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또 충남도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한다면 설문대상 300명은 너무 적다. 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 연구모임에서 무엇을 도출해 낼 것인지, 가능한 영역인지 명확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8. 종합의견

- 중복지원 문제가 상시 제기된다. 개인정보문제로 이를 점검할 수가 없다. 공무원 입장을 이해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취약계층 먹거리복지 등 복지에 있어 중복 지원 해결 문제도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마무리	1. 8월말까지 각 소속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먹거리복지 지원사업과 관련, 지원현황 (지원대상 규모), 운영실태, 개선방향 등에 대해 리포트를 작성기로 하다. (자료 수집은 간사가 맡는다.) 2. 2차 모임에서는 각 단체별 레포트를 중심으로 먹거리복지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하고 정책적 제안을 도출한다. 3. 모임 일정 및 장소는 카톡방을 통해 사전에 결정 통지한다. 4. 이연희 대표 “연구모임을 통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충남도 ‘먹거리기본법 조례제정’ 을 계획하고 있다. 좋은 정책 제안이 나와 충남도 먹거리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도록 노력해달라” 며 1차 모임을 마무리 하다.
------------	---

중도일보

2022년 08월 18일 (목)

전국

"취약계층 먹거리 건강 위기"...충남도의회 정책연구모임 발족

이연희 충남도의원 "충남형 정책 모델 제안 하겠다" 밝혀

임봉순 기자



충남도의회 '취약계층 건강과 먹거리 복지정책 발전 방향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식 모습



충남도의회 '취약계층 건강과 먹거리 복지정책 발전 방향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식 모습

충남도의회 '취약계층 건강과 먹거리 복지정책 발전 방향을 위한 연구모임'이 16일 서산시 민센터 청년활력공간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취약계층 건강과 먹거리 복지정책 발전 방향을 위한 연구모임은 코로나19 이후 결식 등으로 취약계층의 건강 위기가 가중되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출범했으며, 취약계층의 먹거리 실태를 심층 조사하고 복지 선진지 사례를 살펴,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충남형 먹거리 복지 모델을 개발해 충남도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이 연구모임 대표를 맡기로 했으며, 세종충남가족복지회복지회 푸드마켓 박두웅 운영위원장이 간사를 맡았다.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과 김윤정 한서대 보건상담복지학과 교수, 김택진 서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이상복 서산시 장애인복지관장, 한용욱 적십자 서산지회장, 김미영 대한노인회 서산지회, 이여란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등도 참여한다.

이연희 의원은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충남형 먹거리 복지정책 및 모델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봉순 기자 ibs9900@

2차 회의 및 토론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개 요

- 일 시 :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14:00 ~ 16:00
- 장 소 :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 참 석
 - 대표 : 이연희(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 간사 : 박두웅(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
 - 회원 : 이상복(서산시장애인복지관), 한용옥(적십자서산지구협의회)
이여란(서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용역 : 이창식(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참관 : 최동식(서산시의회)

□ 회의 내용

- 이창식 한서대 교수,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 및 복지정책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실시
- 1차 모임 각 단체별 제출 리포트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토의
 - 설문 대상에 장애인 등 실제 복지사각지대를 포함·보완해야함.
 - 설문에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 용어를 사용하는 배려가 필요함.
 - 먹거리 지원 인프라 및 전달체계 측면을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임.
 - 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 및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 회의 결과

- 이창식 교수팀은 회원들이 제기한 문제점 및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용역을 수정 보완 진행하기로 함.
- 연구모임 회원들은 연구팀의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적극 참여하기로 함.

취약계층 건강과 먹거리 복지정책의 발전 방향을 위한 연구모임(2차 회의록)

회의명	2022년 9월 14일 2차 모임		
일 시	2022년 9월 14일(수) 14 : 00 - 16 : 00	장 소	서산시자원봉사센터
참석자	이연희 도의원(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대표) 박두웅(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 운영위원장, 간사) 이상복(서산시장애인복지관, 관장) 한용옥(적십자서산지구협의회, 회장) 이여란(서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이창식(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동식(서산시의회 의원. 업저버)		
모임 내용	1. 참석 회원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현숙 위원님 도의회 일정, 김택진 서산자원봉사센터장 포항 수해봉사, 이미영 노인회 사무국장 행사 일정으로 불참 안내. - 최동식 서산시의원 먹거리 복지 현황 청취를 위해 참석 - 이연희 대표 외 7명 참석자 소개하다. 2. 이연희 대표 인사말씀 - 바쁘신 일정에도 연구모임 제2차 회의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연구용역은 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이창식 교수가 진행하고 설문조사, 중간·최종 보고회, 자문회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2월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정책 과제를 발굴·제시할 예정이다. - 연구용역 보고회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 - 바쁘신 일정에도 충남도의회 김재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찬배 사무처장, 김현진 입법정책담당관, 안병수 홍보담당관, 장진원 총무담당관께서 본 연구모임에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린다.		

○ 연구 착수보고회는 이창식 교수가 PPT를 통해 보고회 발표로 진행되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1. 연구의 필요성

- 취약계층의 경우 식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영양 문제는 만성질환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로 발생되고 있다.
- 충남의 경우 충남도 먹거리보장 기본계획, 충남도 푸드플랜 수립연구를 비롯하여 서산, 홍성, 아산 등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 계획이 있으나 먹거리 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 국내 및 외국의 취약계층 대상 먹거리 정책 분석
-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분석 및 개선 시사점 도출
- 충남형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복지정책 제안
-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광역푸드통합지원센터 및 시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제안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설문조사, 자문회의를 통해 결과 도출
- 설문조사 방법으로는 15개 시군, 시군별 67명을 임의표집하여 설문조사
- 표본수는 결식아동, 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1,000명으로 설정
- 지역을 하나의 집단으로 하여,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지역별 군등 표집

4. 자료 수집방법

- 결식아동 및 독거노인이 이용하는 충남 15개 시군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이용자 중심 자료 수집
-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담당자에게 설문의 취지 및 요령을 설명하고, 방문하는 저소득층 아동 및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요청하도록 부탁, 설문 종료 후 2,000원 상당의 답례품 제공
- 설문지 회수가 늦어질 경우 노인복지관, 무료경로식당 및 지역아동센터를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
- 설문기간은 배포 후 2주간으로 설정한다.

	5. 설문조사 내용 - 먹거리 실태 : 식사 결핍정도, 결식에 대한 불안감, 과일, 채소 등 먹거리 신선도, 음식의 안정성, 푸드뱅크, 푸드마켓 이용 실태, 경로무료식당, 도시락 배달 이용 실태 등 - 건강권 확보 여부 - 정책에 대한 의견 : 공유식당, 공유부엌, 푸드바우처 이용에 대한 의견 및 먹거리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의견 등
--	---

2차 회의 및 연구 용역에 대한 의견제시	○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듣고 위원들은 조사방법 및 내용에 대해 필요한 추가 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이상복 장애인복지관장 - 설문대상이 15개 시군 전체 1,000명이면, 시군당 67명이다. 과연 이 정도 표본으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나? 예를 들어 재가장애인의 경우 활동 자체가 어렵다. 이런 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취합하나? 실제 복지사각에 있는 분들이 설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2. 박두용 간사 - 공유부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의 용어는 실제 현장에서 먹거리 지원을 받는 분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가 아니다. 질문의 설계가 정밀해야 한다. 무엇보다 설문 대상중에 현장에서 먹거리 복지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단체 종사자들의 의견도 필요하다고 본다. - 먹거리 복지는 식재료 관련, 음식조리 관련, 취약계층으로의 전달체계 등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식재료 관련에 치중되어 있고, 먹거리복지에 반드시 필요한 음식 조리실 등 인프라 구축이나 전달체계는 민간단위로 떠넘기고 있는 형태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들여다 보아야 한다. 3. 한용옥 적십자 회장 - 면 단위에 설치 되어 있는 나눔냉장고의 경우 거동이 어려운 분들은 이용을 하지 못한다. 자연부락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설문대상에 이분들이 배제되게 된다.
--	---

4. 이여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모르겠다.
- 먹거리 복지가 실행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조리된 음식을 원한다. 이를 지원한 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형편이다.

○ 토의결과

- 이창식 교수 연구팀은 위원들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여 용역을 진행하기로 함.
- 연구진은 자료수집, 현장실태 파악 등을 위해 위원들께 협조요청을 하고, 위원들은 이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로 함.
- 협조요청 항목과 내용은 간사를 통해 진행하기로 하고,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3차 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루기로 함.

2차 모임 기사 스크랩

忠清日報

2022년 09월 14일 (수)

대전/충남

충남도의회, 도내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 파악 나선다

박보성 기자

‘취약계층 건강과 먹거리 복지정책 발전 연구모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이연희 의원 “연구용역 통해 새로운 먹거리 복지정책 모델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



▲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취약계층 건강과 먹거리 복지정책 발전 방향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이연희)은 14일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회의실에서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 및 복지정책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외 취약계층 대상 먹거리 정책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실태를 파악해 충남형 먹거리 복지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내용은 △국내 먹거리 프로그램 및 문헌 조사 △취약계층 대상 먹거리 실태 설문조사 △먹거리 복지 선진국 조사 △충남형 복지정책 모델 제안 등이다.



연구용역은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고, 설문조사, 중간·최종보고회, 자문회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12월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정책 과제를 발굴·제시할 예정이다.

연구모임의 대표인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충남 취약계층의 먹거리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복지정책의 긍정적인 변화를 제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먹거리 복지정책 모델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모임은 취약계층 결식문제 등을 극복하고, 취약계층의 건강 및 먹거리 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발족해 활동해오고 있다.

연구모임은 이날 착수보고회 이후 연구모임 제2차 회의에서는 충남도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센터, 노인회의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내포=박보성기자

박보성 기자 bakin114@hanmail.net

3차 회의 및 토론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개 요

- 일 시 :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14:00 ~ 16:00
- 장 소 :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 참 석
 - 대표 : 이연희(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 간사 : 박두웅(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
 - 회원 : 김윤정(한서대 보건상담복지학과), 김택진(서산시자원봉사센터)
이상복(서산시장애인복지관), 한용옥(적십자서산지구협의회)
김미영(대한노인회서산지회), 이여란(서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용역 : 이창식(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회의 내용

- 이창식 한서대 교수,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 및 복지정책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실시
- 중간보고 청취 후 평가 및 보완 내용 토의

□ 회의 결과

- 연구용역 중간 보고 보완 사항
 - 설문조사와 감취진, 발굴되지 않은 소외계층에 대한 조사 필요
 - 공유부엌 및 먹거리 전달체계에 경로당 활용방안 연구 필요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가칭)먹거리지원 컨트롤 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검토 필요
 - 시군별 먹거리 지원 서비스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담아야 할 것임.

취약계층 건강과 먹거리 복지정책의 발전 방향을 위한 연구모임(3차 회의록)

회의명	2022년 11월 22일 3차 모임		
일 시	2022년 11월 22일(화) 14 : 00 - 16 : 00	장 소	서산시자원봉사센터
참석자	이연희 도의원(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대표) 박두웅(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 운영위원장, 간사) 이상복(서산시장애인복지관, 관장) 한용옥(적십자서산지구협의회, 회장) 이여란(서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김윤정(한서대 보건상담복지학과 교수) 김택진(서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미영(대한노인회서산지회, 사무국장) 이창식(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 및 복지정책 방안 연구 중간보고자		
모임 내용	1. 참석 회원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현숙 위원님 도의회 일정으로 불참. 2. 이연희 대표 인사말씀 - 바쁘신 일정에도 연구모임 제3차 회의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 9월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 및 복지 정책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이어 오늘 연구용역의 중간 과정 및 성과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게 되었다. - 중간보고는 한서대학교 건강상담복지학과 이창식 교수가 진행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오는 12월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정책 과제를 발굴·제시할 예정이다. -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 - 바쁘신 일정에도 충남도의회 정운태 전문위원께서 본 연구모임에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연구 중간보고회는 이창식 한서대 교수가 PPT를 통해 발표로 진행되었다.
다음은 주요 발표 내용이다.

1. 연구의 필요성

- 본 연구는 문헌연구, 푸드뱅크 및 마켓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장애인 대상 설문조사, 먹거리 복지 전문가 대상 FGI를 통해 충남 먹거리 복지정책을 개발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그 내용으로 국내외 취약계층 및 장애인 대상 먹거리 정책 분석, 설문조사를 통한 취약계층 및 장애인의 먹거리 실태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충남형 취약계층 및 장애인을 위한 먹거리 복지정책 개발 및 제언에 있다.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설문조사, 자문회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
- 설문조사 방법으로는 소외계층의 경우 15개 시군, 시군별 50명을 임의표집하여 충남의 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75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 장애인은 서산시(100명), 홍성군(75명), 아산시(75명)을 임의 표집, 전체 7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FGI

- 푸드뱅크, 마켓, 사회보장협의체, 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장애인복지관 소속 전문가 6인
- 먹거리 지원 실태 및 전달체계, 정책 등에 대한 논의
- 2022년 11월 7일 시행

5. FGI 주요 질문

- 소외계층 및 장애인의 먹거리 실태?
- 소외계층 및 장애인을 위한 먹거리 전달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 현재 소외계층 및 장애인 대상 광역 및 지자체의 먹거리 정책은?
- 광역 및 지자체 먹거리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먹거리 복지정책이 있다면?
- 충청남도 먹거리 정책의 방향은?

6. 중간용역 보고 결과

(1) 소외계층

- 평소 식비가 없어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6%(41명)으로 이들에 대한 발굴, 원인 및 해결책이 필요함
- 평소 식사준비가 어려워서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9.4%(64명)으로 이들에 대한 발굴, 원인 및 해결책이 필요함.
- 다음날 식사를 못할까 “불안하다” 4.8%(32명), “약간 불안하다” 36.4%로 결식에 대한 불안이 41.2%로 많음.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식사돌봄 서비스가 요구됨.
- 신선 채소 및 과일을 “전혀 먹지 못하거나 거의 먹지 못한다” 49.6%로 조사 대상 중 절반에 달함. 건강을 위한 신선식품 제공의 서비스 방안이 요구됨.
- 혼자서 식사 준비가 가능하지 않다 6.5%(44명). 시군별로 공주, 보령, 당진시가 각 6명으로 많음. 이들에 지원책이 필요함.
- 먹거리 지원 시설의 접근성 질문 결과, 이용이 쉽다는 응답이 푸드뱅크와 마켓으로 나왔고, 이들 시설의 추가 설치 및 홍보 방안 모색 필요한 것으로 나옴.
- 먹거리 지원 서비스 중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배달 반찬/ 배달 식사로 나옴 62.4%. 나눔냉장고는 서산시가 41.9%로 나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옴.
- 먹거리 복지정책으로 소외계층이 쉽게 이용 가능한 시설확대 50.2%, 대상자에게 맞는 먹거리 개발이 21.2%로 나옴으로 충남도 차원의 먹거리 지원을 위한 시설 확대 및 시군확산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장애인의 경우

- 소외계층과 설문조사 결과가 유사함.
- 다만 혼자서 식사 준비가 “전혀 가능하지 않다” 17.4%(40명), “식사 도움을 받아서 한다” 48.3%로 소외계층 24.4%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음.
- 먹거리 지원서비스 중 가장 적합한 서비스로 배달 반찬/식사 47.0%로 나옴.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듣고 위원들은 결과보고서에 추가 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이상복 장애인복지관장

- 설문조사와 감춰진, 발굴되지 않은 소외계층이 있다. 이는 고독사와도 연결된다.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 김영미 노인회 사무국장

- 공유부엌의 경우 마을마다 설립되어 있는 경로당을 활용하는 방안이 연구될 수 있다. 또한 먹거리 복지전달 체계에서도 이를 활용한다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4. 한용욱 적십자 회장

- 적십자 진지방외 서산시 인지면에 ‘행복나눔조리방’이라는 공유부엌을 설치, 봉사단체들이 이용하고 있다. 충남형 먹거리 복지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5. 이여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 읍면동별 공유부엌이 먹거리 복지정책에 있어 모두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6. 김택진 서산시자원봉사센터장

- 중복지원 등을 방지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대상자 서비스를 위해서는 지자체별 컨트롤타워의 설치 운영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 여부가 필요하다.

7. 김윤정 한서대 교수

- 연구조사 결과 시군별 먹거리 지원 서비스 격차가 크다. 각 시군의 먹거리 서비스 자원조사와 더불어 조례 등에 대한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충남형 복지 정책을 제안함에 있어 실천방안도 시군별 격차를 감안한 정책 대안을 담았으면 한다.

○ 이연희 대표 최종 마무리

- 내년 초 충남형 먹거리 기본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 이번 연구 용역결과와 위원들의 제안을 담아 실현 가능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충남도에 제시하겠다.
- 앞으로 결과보고서까지 한달여가 남았다. 위원들께서 추가할 내용을 이창식 교수 또는 간사를 통해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최종 결과보고회는 12월 15일에 진행하기로 한다.

충남도의회,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 연구 중간 보고회 개최

박보성 기자

충남도의회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정책 발전 연구모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이연희 의원 "실태조사 기반으로 충남형 먹거리 복지 모델 제시할 것"



▲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 및 복지정책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충남도의회 '취약계층 건강과 먹거리 복지정책 발전 방향을 위한 연구모임'은 22일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회의실에서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 및 복지정책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 정책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및 FGI(포커스그룹인터뷰) 전문가 의견 결과를 발표했다.

협력단이 충남의 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7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평소 식비가 없어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응답이 6%(41명)△식사준비가 어려워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응답이 9.6%(64명)△다음날 식사를 못하게 될까봐 '불안하다'는 응답이 4.8%, '약간 불안하다'는 응답이 36.4%(245명)로 도내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250명(서산 100명·홍성 75명·아산 7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22%(52명)가 결식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FGI 결과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경로당 무료급식 같은 집단식사가 어려운 경우의 대책 마련과, 신선한 채소 및 과일의 섭취 등 먹거리 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등 거동이 어려운 대상에 대한 이동 대책과 밀키트·밥차 등 새로운 형태의 먹거리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연구모임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충남형 먹거리 보장 및 복지정책의 기초로 삼을 예정이며, 12월에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연희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은 저소득층, 임산부, 돌봄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먹거리 지원 확대 및 복지 정책 마련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중간보고회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충남형 먹거리 복지정책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내포=박보성기자

박보성 기자 bakin114@hanmail.net

4차 회의 및 토론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개 요

- 일 시 :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14:00 ~ 16:00
- 장 소 :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 참 석
 - 대표 : 이연희(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 간사 : 박두웅(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
 - 회원 : 이현숙(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윤정(한서대 보건상담복지학과), 김택진(서산시자원봉사센터)
이상복(서산시장애인복지관), 김미영(대한노인회서산지회)
 - 용역 : 이창식(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회의 내용

- 이창식 한서대 교수,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 및 복지정책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실시
- 중간보고회에서 지적된 사항 보완 내용 설명
- 충청도 및 기타 지자체 지원 조례에 대해 비교 보장
-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 발표

□ 회의 결과(최종 보고 보완 사항)

- 지자체별 먹거리지원조례 유무와 먹거리 실태의 차이점 비교 필요
- 조례 발의 시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은 유통의 개념이 아닌 복지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성 제기
- 충청도 먹거리 기본조례의 경우 농식품 유통에 주안점을 두고 제정되어 있는데, 복지 개념으로의 전환을 고려하여 조례 제·개정해야 할 것임.

취약계층 건강과 먹거리 복지정책의 발전 방향을 위한 연구모임(4차 회의록)

회의명	2022년 12월 15일 4차 모임		
일 시	2022년 12월 15일(목) 13 : 00 - 15 : 00	장 소	서산시자원봉사센터
참석자	이연희 도의원(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대표) 이현숙 도의원(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두웅(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 운영위원장, 간사) 이상복(서산시장애인복지관, 관장) 김윤정(한서대 보건상담복지학과 교수) 김택진(서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창식(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 및 복지정책 방안 연구 최종보고자		
모임 내용	1. 불참 회원 - 이여란(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용옥(적십자) 소속단체 일정으로 불참 2. 이연희 대표 인사말씀 - 연말과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구모임 제4차 회의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 11월 22일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 및 복지 정책 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진행하고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최종보고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 이번 연구용역 최종 결과물을 통해 저소득층, 돌봄아동,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먹거리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 정책 및 조례제정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연구 최종보고회는 이창식 한서대 교수가 책자와 PPT를 통해 발표로 진행되었다.
다음은 주요 발표 내용이다.

1. 중간보고회에서 추가된 보완 사항

- 중간보고회에서 추가된 사항으로 국내 취약계층 대상 먹거리 지원 관련 법률을 조사 분석하였고, 더불어 충청도 및 이외 지자체 지원 조례에 대해 조사했다. 충청남도의 경우 2019.12.30.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시군으로는 당진시, 부여군,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순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2.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

- 연구결과를 토대로 충청남도 취약계층 및 장애인의 먹거리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 지역사회돌봄(안)에 먹거리 돌봄을 포함

- 현재 국회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법률’ 제정이 준비되고 있다.(정춘숙, 전재수 의원)
- 상기 법률이 제정된다면 충청남도의 경우 식사, 반찬 배달,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등 ‘먹거리 돌봄 서비스’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 즉, 지역사회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에 ‘먹거리 돌봄 서비스의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의 구체화를 도모해야 한다.

2) 결식 불안 감소를 위한 취약계층 및 장애인 먹거리 긴급 돌봄 제도화

- 미국의 경우 실업자 및 저소득층 대상 긴급 식량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우리의 경우도 이와 같은 시스템 구축과 제도화가 필요하다.
- 방향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안)을 통해 긴급대상자에게 식재료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하여 긴급을 요하는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먹거리 돌봄 서비스, 지역먹거리 체계(푸드플랜) 내에서 일부 운영

- 취약계층에게 있어 신선채소와 과일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나왔다. 이에 대한 원인 및 해결책이 필요하다.
- 따라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지향하는 푸드플랜 내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 채소와 과일이 취약계층 및 장애인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충청도 및 시군이 조례에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먹거리 지원의 지속을 위해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 할 ‘지역먹거리통합 지원센터(안) 구축

- 다양한 먹거리 지원 단체들의 사업을 지원하고 대상의 중복, 사업의 중복 및 연속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안) ‘ 구축이 필요하다.

5) 마을회관에 ‘ 공유부엌 ‘ 설치 지원 제도화

- 취약계층 및 장애인 모두 먹거리 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시설 확대가 요구된다.
- 마을회관에 공유부엌을 설치하여 마을에서 생산된 식재료로 식사 alc 반찬을 준비하고, 필요 시 배달도 가능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시군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의 제도화가 바람직 하다.

6) ‘이동마켓’ 운영지원 제도화

- 선행연구에 따르면 ‘로컬푸드의 접근성’ 이 높은 지역일수록 비만, 당뇨, 조기 사망률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및 장애인에게 신선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이동마켓’ 을 운영할 경우 이들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 또한 식재료 구입이 어려운 지역은 ‘식품빈곤지역’ 에 해당한다. 정부는 식품 빈곤 지역에 개업하는 소매업체에게 세금 우대 조치 등 지원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최종 보고서 평가

- 김윤정 : 충남도 및 시군 조례와 관련 조례가 있는 지자체와 없는 지자체간 비교분석이 있었으면 좋겠다.
- 박두웅 : 광역이나 기초단체 조례에 보면 먹거리 지원조례가 농식품 유통에 치중되어 있다.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은 유통의 개념이 아닌 복지의 개념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 이현숙 : 충남도 먹거리 기본조례를 보면, 농식품 유통에 주안을 두고 작성되어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지원은 복지의 개념이다. 이에 대한 조례 제개정에 나서도록 노력하겠다.

4차 모임 기사 스크랩

충청뉴스큐

2022년 12월 15일 (목)

대전/충남

충남도의회, 취약계층 결식 및 영양 불균형 해소 정책 제안

이연희 의원 "최종 결과물 토대로 도정 먹거리 복지 정책 제언 및 입법 검토 추진"

양승선 기자



충남도의회, 취약계층 결식 및 영양 불균형 해소 정책 제안

[충청뉴스큐] 충남도의회 '취약계층 건강과 먹거리 복지정책 발전 방향을 위한 연구모임'은 15일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회의실에서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 및 복지정책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취약계층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 정책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와 FGI 전문가 의견 결과를 분석해 반영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충남도정에 필요한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의 정책적·입법적 제언사항을 발표했다.

협력단은 충남형 먹거리 보장 및 복지 정책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내 먹거리 돌봄 포함 취약계층 및 장애인 먹거리 긴급 돌봄 제도화 지역 먹거리 체계 내 취약계층 대상 먹거리 지원 명문화 먹거리 지원 지속성을 위한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연희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언한 사항들이 도정에 반영되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결식과 영양 불균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충남의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및 복지 정책의 종합적인 로드맵으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먹거리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IV. 연구모임 추진 성과

□ 충남 먹거리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초석 마련

- 국내 및 외국의 취약계층 및 장애인 대상 먹거리 지원사업 분석
- 설문조사를 통한 충남지역 취약계층 및 장애인 먹거리 실태 조사
- 현재 먹거리 보장 기본권 조례의 한계점 및 개선점 제시

□ 취약계층을 위한 충남 먹거리 복지정책 개발 방향성 제시

- 도내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실태 분석을 통해 시군별 격차가 심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충남도 차원에서의 먹거리 복지정책 제정의 시급성 제시함.
-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서비스는 유통이 아닌 복지의 개념으로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음에도, 현행 복지행정 서비스(예산 등)에서 누락되어 있음을 분석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

□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서비스의 중복성 문제 제시

- 기능별 복지행정서비스의 한계로 인해 취약계층의 기본 인적사항이 중복 제공되며, 이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중복지원 문제점이 나타남 으로서 복지사각지대 등 꼭 필요한 지원대상이 소외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함.
- 공급 중심 먹거리 복지서비스(지원받는 대상자의 선택권 없음)의 문제점과 정크푸드 위주의 먹거리 지원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건강한 먹거리 (신선채소 및 과일, 육류 등) 지원을 위한 필요성을 제시함.



연구모임 결과 및 제언

연구모임 결과 및 제언

1. 결과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음

1) 취약계층의 먹거리 실태

- 평소 식비가 없어 식사를 못하거나 식사 준비가 어려워서 식사를 못하는 취약계층이 다수 있어 이들을 위한 먹거리 돌봄이 필요함
- 결식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식사 돌봄 서비스 지원방안이 필요함
- 신선 채소와 과일을 먹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다수이며, 이들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생산되는 신선 채소 및 과일의 제공 방안 마련 필요함
- 혼자서 식사 준비가 가능하지 않다는 취약계층이 다수임. 이들을 위한 식사배달 및 반찬 배달의 먹거리 서비스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식사 시 가족이나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서 식사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식사돌봄 방안 마련 필요
- 치료식과 연하 및 삼킴 도움식이 적합한 취약계층에게 이러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취약계층은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다른 먹거리 지원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았음. 따라서 대상별 맞춤형 먹거리 지원 서비스 방안 마련 필요함

- 취약계층이 가까이 있어 이용하는 시설은 푸드뱅크, 푸드마켓이었음. 그러나 푸드뱅크, 푸드마켓은 시군에 한 곳만 있어 접근성이 높은 편도 아닌 점을 고려한다면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동마켓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취약계층이 가장 선호하는 먹거리 지원 서비스는 배달 반찬/식사인데,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배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먹거리 지원 서비스의 내실화 방안으로 쉽게 이용 가능한 시설 확대 요구가 가장 높아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먹거리 지원 서비스가 취약계층의 건강에 큰 이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마을에서 생산된 신선 식재료를 활용한 먹거리 지원 필요함

2) 장애인 먹거리 실태

- 장애인 중 평소 식비가 없어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 필요
- 식사준비가 어려워 식사를 거르는 장애인이 있어 이들을 지원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결식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 필요함
- 신선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어 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신선 채소 및 과일의 규칙적인 지원 방안 필요함
- 혼자서는 식사준비가 불가능한 장애인이 다수 있어 이들을 발굴하고 식사 준비 지원 또는 배달 식사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장애인이 식사 시에 도움을 받아야 식사가 가능하므로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치료식이나 연하 및 삼킴 도움식이 적합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장애인은 푸드뱅크, 푸드마켓 및 나눔냉장고를 많이 이용하고 이들 시설은 접근성이 높은 시설임. 이러한 시설들이 장애인에게 조금 더 가까이 있도록 먹거리 서비스 시설 확대 필요

- 장애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먹거리 지원 서비스 유형은 배달 반찬/식사이므로 이를 지원할 방안 필요
- 장애인의 먹거리 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쉽게 이용 가능한 시설 확대이므로 먹거리 서비스 시설과 복지가 통합된 통합적 복지 및 먹거리 돌봄 방안 필요
- 먹거리 지원 서비스가 장애인의 건강에 도움이 되므로 이를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2. 제언

- 연구결과를 토대로 충청남도의 취약계층 및 장애인의 먹거리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1)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안)에 먹거리돌봄을 포함

- 모든 돌봄 활동의 기본이 되는 영역이 먹거리임. 식사와 영양관리 서비스 효과는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과 같은 정서적 건강수준도 크게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됨. 따라서 돌봄 중에서 먹거리 돌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필요 있음
- 현재 ‘지역사회통합돌봄법률’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2건의 법안(정춘숙 의원, 전재수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상태임. 현재 법안은 ‘보건의료이동지원 서비스, 재활치료 서비스, 장기요양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주거지원 서비스’ 만을 규정하고 있음
- 만일 지역사회통합돌봄(안) 국회를 통과한다면 충청남도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식사/반찬 배달, 영양관리, 식생활교육 등 ‘먹거리 돌봄 서비스’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 필요. 즉,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먹거리돌봄 서비스의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의 구체화 필요

2) 결식 불안을 감소를 위한 취약계층 및 장애인 먹거리 긴급 돌봄 제도화

- 취약계층은 다음 날 식사를 못 하게 되실까봐 불안해 하십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약간 불안하다”는 응답이 36.4%(245명), “매우 불안하다”는 응답은 4.8%(32명)이었음. 장애인은 “약간 불안하다”는 응답은 16.0%(33명), “매우 불안하다”는 응답은 6.5%(15명)이었음
-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실직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와 가족의 간병 등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굶주림에 직면한 어려운 상황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대상은 취약계층과 장애인일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실업자 및 저소득층 대상 긴급 식량 지원 프로그램(The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을 통하여 굶주림을 해결하고 있음
- 따라서 긴급대상자를 대상으로 먹거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이의 제도화가 필요함. 즉, 긴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긴급 신청을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진단하고 지역의 먹거리 서비스를 관리하는 기능을 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안)에서 식재료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하여 긴급을 요하는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지원할 필요있음

3) 먹거리 돌봄 서비스가 지역 먹거리 체계(푸드플랜) 내에서 일부 운영 제도화

- 취약계층이 신선 채소를 “거의 먹지 못한다”는 응답이 34.6%(234명), “전혀 먹지 못한다”는 응답은 4.6%(31명)이었고, 신선 과일을 “거의 먹지 못한다”는 응답이 42.9%(289명), “전혀 먹지 못한다”는 응답은 6.7%(45명)이었음. 장애인은 신선 채소를 “전혀 먹지 못하거나 거의 먹지 못하는” 응답은 27.0%(62명)였고, 신선 과일을 “전혀 먹지 못하거나 거의 먹지 못하는” 응답은 38.5%(89명)로 나타남

- 한편 푸드플랜은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Food System,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전략으로, 산업형 푸드시스템(대량생산·대량소비)을 생태순환적인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함을 의미함.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은 생산-유통 및 가공-소비-폐기의 먹거리 선순환 시스템과 식품에 대한 영양, 접근성, 안전과 분배와 관련된 ‘먹거리 정의 및 공공성’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 및 기초 지자체 등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는 부분임. 정책의 영역에서 푸드플랜은 ‘먹거리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먹거리의 생산과 공급, 영양개선, 안전관리, 식생활 교육, 환경보전 등 관련된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계획’을 내용으로 함
- 따라서 푸드플랜 내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 채소와 과일이 취약계층 및 장애인에게 공급되도록 충남도 및 시군이 명문화하고, 공급의 방법은 식품 이용권을 활용하는 방안이나 과일 및 채소 꾸러미를 이용하는 방안 마련 필요함

4) 먹거리 지원이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안)’ 구축

- 복지 및 먹거리 전문가 대상 FGI에서 사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함
- 주민자치센터, 지역사회 복지기관, 자원봉사·시민사회단체, 식생활교육 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이 먹거리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상의 중복, 사업의 중복 및 연속성 부족 등으로 사업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따라서 먹거리 지원사업이 지속성, 연속성 및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지역사회 복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자원봉사·시민사회단체, 식생활교육 단체, 보건의료기관 등 먹거리 돌봄 영역에서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안)’를 구축하고 이 센터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필요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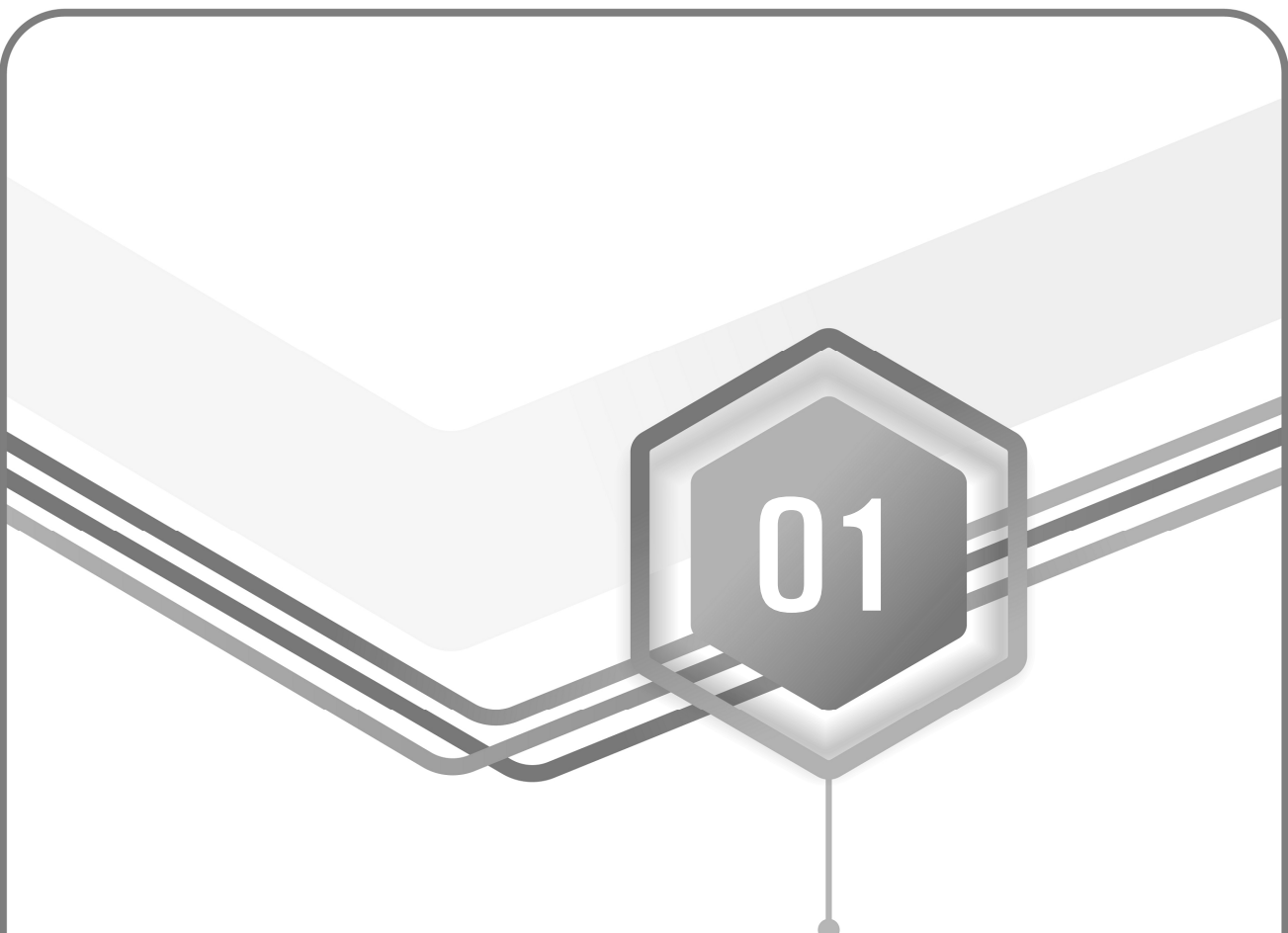
5) 마을회관에 공유 부엌 설치(Community Kitchen) 지원 제도화

- 취약계층 및 장애인 모두 먹거리 지원 서비스의 내실화 방안으로 쉽게 이용 가능한 시설 확대를 요구함
- FGI에서 공유 부엌/공유 식당 등 음식을 조리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간 확충 방안 모색 필요함을 제기
- 한편 공유 부엌은 기능적 특징에 따라 나눔 부엌이나 나눔 밥상, 공동주방, 공동식탁 등으로 불리기도 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나 화합의 의미를 드러내는 이름 또는 사회적·문화적 기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소셜 다이닝, 커뮤니티 키친 등으로 부르기도 함. 공유 부엌은 단지 주방을 공유하고 식사하는 행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대화와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나아가 창업 인큐베이팅을 위한 지식까지 공유하는 활동이 가능한 곳임(장상은, 정경운, 2018)
- 마을회관은 대부분 마을 입구나 전면에 위치하며, 자치적 집회소로서의 기능과 마을 공동재산의 운영 및 관리 기능, 그리고 마을 행정의 중심으로서 말단 행정적 기능을 수행함
- 마을회관에 공유 부엌을 설치하여 마을 주민 및 자원봉사자가 마을에서 생산된 식재료로 식사 및 반찬을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배달도 가능하며 매일 1회 이상을 운영할 필요 있음. 이러한 운영을 위하여 비용문제, 공간확보 문제, 매일 식사준비, 인력 문제 등의 해결이 필요함. 따라서 충남도와 시군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공유 부엌 내에 나눔 냉장고를 설치하여 마을 주민이 잉여 식재료를 나눔 냉장고에 넣어두고 필요로 하는 주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 및 장애인의 먹거리 보장에 한단계 더 높이 기여하도록 함

6) 이동 마켓 운영지원 제도화

- FGI에서 먹거리 지원 서비스와 함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대상에 대한 이동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찾아가는 서비스인 이동 마켓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음
- 선행연구에 의하면 ‘로컬푸드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비만, 당뇨, 조기 사망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Deller et al., 2017). 따라서 이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및 장애인에게 신선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이동 마켓을 운영할 경우 이들의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 등에 큰 도움이 됨
- 한편 식재료 구입이 어려운 마켓이 없는 지역은 식품빈곤지역에 해당되는데, 식품빈곤지역(식품 사막: Food Deserts)은 미국 농무부의 Thrifty Food Plan(적절한 영양을 공급하는 식품과 섭취량을 정해놓은 플랜)에 명시된 과일과 야채 등의 식재료들을 반경 2km 이내의 어떠한 마켓에서도 구입할 수 없는 지역을 지칭함(Rose et al., 2009).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시설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선한 식품을 사는 데에 제약이 따름(Herrera, 2011). 이에 오바마(Michelle Obama) 정부는 식품빈곤지역(Food Deserts)에 개업하는 소매업체에게 세금우대조치를 취함으로써 2017년까지 식품빈곤지역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수행하였음
- 한국의 농촌 등 마켓이 없는 지역과 거동이 불편하여 푸드 마켓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및 장애인을 위하여 이동 마켓 운영이 필요함. 이동 마켓은 이동거리, 대상자 수, 식재료 종류, 예산 등 요인들을 검토하여 운영이 필요하며, 이 사업이 지속성과 규칙성을 갖기 위해서는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부 록



01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기관 현황 및 개선사항
- 회의 자료 -

연구모임
박두웅 간사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기관 현황 및 개선사항

연구모임
박두웅 간사

I 충청도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 충남지역에는 광역기관으로 충남기부식품지원센터와 기초푸드 20곳, 그리고 푸드마켓 7곳이 운영 중

○ 기초푸드뱅크(20곳)

지역	푸드뱅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천안	천안기초푸드뱅크	이성수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708	041-523-1377
천안	천안서부푸드뱅크	문용식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13-31	070-7547-8109
천안	충남가톨릭 농수산물지원센터	조형상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347	041-582-1388
천안	우리충남푸드뱅크	서성윤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782	041-554-1377
공주	공주기초푸드뱅크	소진원	공주시 신기동길 48-8	041-857-6004
보령	보령시푸드뱅크	장희경	보령시 주공로 50	041-936-8501
보령	행복보령푸드뱅크	이홍집	보령시 원동1길 95, 1층	041-931-8502
아산	아산시기초푸드뱅크	유계준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111-1	041-534-1377
서산	서산시기초푸드뱅크	박근일	서산시 서해로 3456	041-667-2303
서산	서산카리타스 농수산물지원센터	윤여창	서산시 해미면 덕지천로 693-14	041-688-1997
논산	논산사랑푸드뱅크	전종혁	논산시 생외길 14	041-736-1004
계룡	사랑나눔푸드뱅크	이정기	계룡시 계룡대로 320, 402호	042-551-9191
당진	당진시나눔푸드뱅크	조성민	당진시 무수동 옛길 40	041-355-5700
금산	금산군푸드뱅크	천병선	금산군 군북면 일흔이재로 112	041-752-7942
부여	부여나눔푸드뱅크	강민용	부여군 규암면 합송 서로 128-3	041-832-0811
서천	좋은친구푸드뱅크	조순희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37 1층	041-952-1414
청양	청양푸드뱅크	이준희	청양군 운곡면 청신로 402	041-944-1500
홍성	홍성군기초푸드뱅크	곽정욱	홍성군 은하면 구성남로 381	041-642-6636
예산	예산군푸드뱅크	김성순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318	041-334-4804
태안	태안군푸드뱅크	임영관	태안군 태안읍 군청2길 2	041-675-1379

○ 푸드마켓

시군	푸드마켓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천안	천안희망나눔푸드마켓	조형상	천안시 동남구 원성1길 24	041-573-1377
보령	행복보령푸드마켓	이홍집	보령시 원동1길 95 1층	041-931-8502
논산	논산사랑푸드마켓	전종혁	논산시 관촉로 277번길 23-13	041-736-1377
서천	서천군좋은친구푸드마켓	조순희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37 1층	041-951-9444
홍성	홍성서해푸드마켓	곽정욱	홍성군 홍성읍 홍성천길 114	041-634-7377
예산	예산다다푸드마켓	김동경	예산군 예산읍 임성로23번길 6	041-335-8700

2. 정책현황

- 기초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자는 종교단체, 자활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 지자체의 경우 1~2명의 사회복지사 인건비 및 월 임대료 지원
- 전국푸드뱅크-광역푸드뱅크(17개소)-기초푸드뱅크(310개소), 기초푸드마켓(130개소)
- 보건복지부 : 법령 및 제도 등 개선,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사업예산 지원
- 광역자치단체 : 지역 내 사업계획 추진, 사업예산 지원
- 기초자치단체 : 관할지역 사업계획 수립, 사업예산 지원
-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 운영

3.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코로나19로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푸드뱅크 기부도 눈에 띄게 감소함.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식품기업들의 생산량이 급감했고, 이는 기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국가가 지원하고 민간이 수행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지자체가 많음. 우리나라는 푸드뱅크 사업이 도입된지 불과 20여 년 만에 기부-배분이 2000억 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나 기초지자체마다 그 수준은 판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단 20개 지자체만이 조례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푸드뱅크를 지원하고 있음. 이는 전체 기초지자체 중 8.8%에만 해당됨.
- 기부식품의 안전은 법적으로 강하게 규제되어 있기에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으나 이용자의 기부식품 선택이나 배분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음.
- 기부식품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고, 양도 충분하지 않음. 또 지역의 네트워크와 신뢰 구조가 견고하지 않고, 호혜적인 자원교환이나 서비스 통합이 어려움.
- 푸드뱅크 사업의 정책 필요성과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학교급식과 같은 공공급식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함. 푸드뱅크 사업이 먹거리 연대의 기반 위에서 지역사회의 먹거리를 적절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함.

I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 나눔냉장고 10개 동, 면 운영(동문1, 동문2동, 석남동, 수석동, 인지면, 고북면, 해미면, 운산면, 음암면, 지곡면)
2. 현황
 - 운영예산 : 300만원/년(석남), 790만원(부석), 150만원(지곡, 음암, 고북, 동문2동, 수석), 250만원(운산), 400만원(해미)
 - 후원물품 : 서산카리타스농수산물지원센터(매주 수요일), 기타 지역 후원자 연합모금 사업으로 행복꾸러미 운영(대산읍)
연합모금 사업으로 독거노인 생일상 차리기(성연면)
인지한우마을 국밥40개/월 지원(인지면)
주민자치회 100만원/분기별 지원(인지면)
주민자치회 사랑의봉다리 반찬지원(팔봉면)
지역 기관과 협약 연간 약 400만원 물품 후원(음암면)
독거노인 밀반찬 배달 사업(보조금, 고북면)
국민건강보험공단 70~80만원/분기 지원(수석동)
 - 주요물품 : 반조리식품, 쌀, 김치, 라면, 통조림, 건어물 등
 - 운영시간 : 월~금요일, 1인 1품목 자유롭게 운영
수석봉사회에서 요일별 2명씩 관리 봉사(수석동)
 - 문 제 점 : 1인 1품목이 잘 지켜지지 않음. 거동불편자 대안 마련 필요
3. 개선안
 - 예산 확대 필요
 - 1인 1품목을 지키지 않는 분들로 다른 분들의 이용하지 못함
 - 식재료보다 조리가 된 밀반찬 요구가 많음(사랑의 밀반찬 나눔 봉사 확대가 필요함)
 - 농식품바우처 제도 활성화 필요
 - 찾아가는 나눔냉장고 사업 추진
 - 반찬가게, 식당, 편의점 등과 협약, 구매카드(교환권) 제공
 - 도시락 업체와 연계 도시락 배달사업
 - 알림 우체통(필요한 물품 요청하는) 설치
 - 찾아가는 나눔냉장고(독거노인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활용)
 - 시 차원에서 반찬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시설(15개 읍면동 공동부엌) 필요
(15개 읍면동 협의체에서 순번을 정해 봉사하는 방식으로 반찬만들기)

Ⅲ

서산시자원봉사센터

1. 따뜻한 밥차

1-1. 현 황

- 65세 이상 노인 및 취약계층 가정, 장애인 세대 등 250세대
- 예산 : 69,800천원(서산시 9,800천원, 기업 60,000천원)
- 봉사단체 : 밥차봉사단(회원 20명)
- 상반기(3~6월), 하반기(9~12월) 매주 목요일(코로나19 이후 도시락)

1-2. 개선, 희망 사항

- 조리실 협소와 환경 열악하여 봉사활동에 어려움,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

2. 행복나눔미

2-1. 현 황

- 65세 이상 노인 및 취;약계층 80명
- 15,000천원(기업 후원)
- 봉사단체 : 행복드림봉사단(회원 32명)
- 매월 1회(계절 음식 등 영양식 도시락 만들어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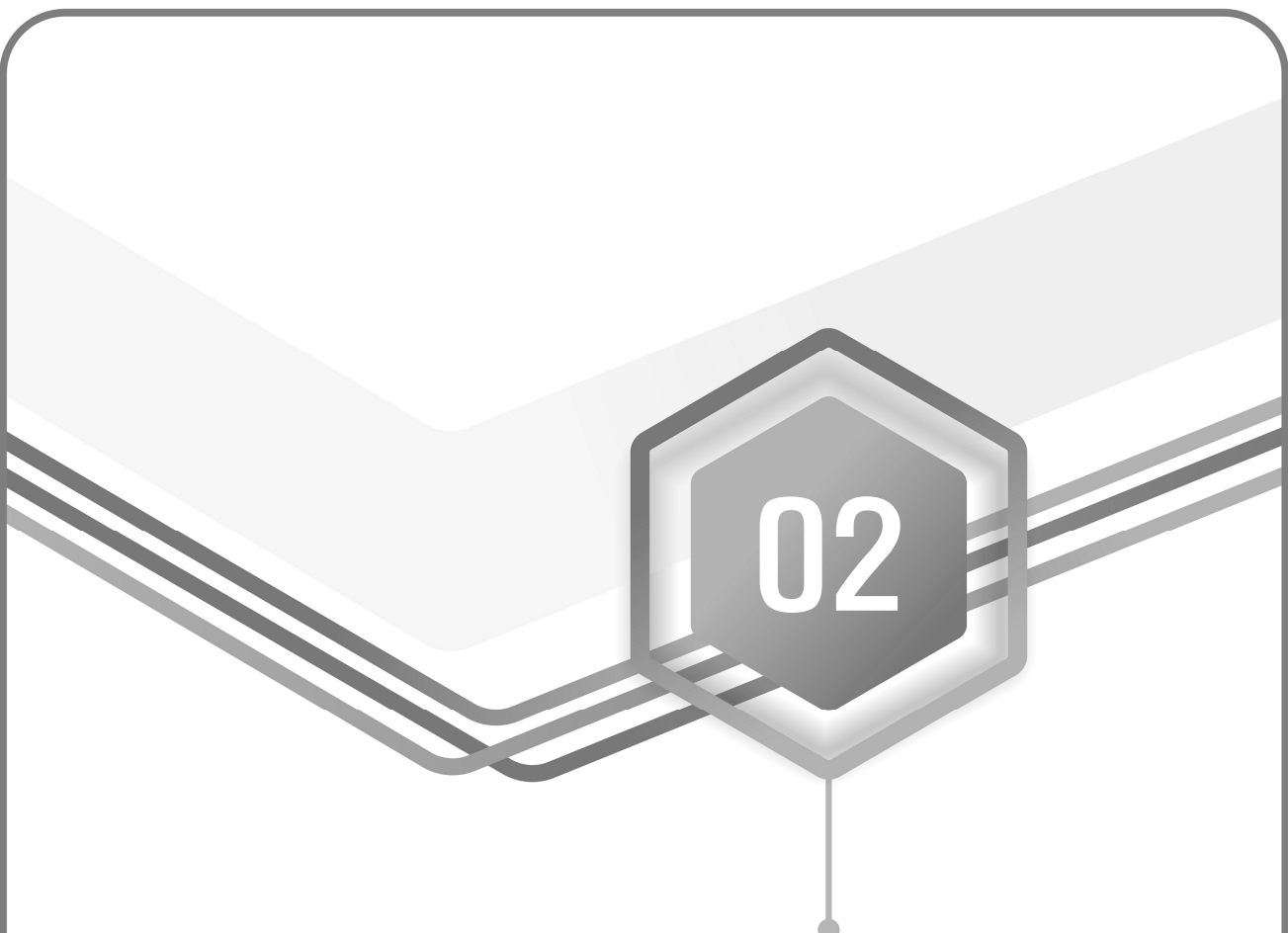
2-2. 개선, 희망사항

- 충남도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로 사업비 지원(사업당 20,000~50,000천원)

IV

대한노인회

1. 대상자 : 노인 34,000명(독거노인 8,700명)
2. 현황 : 서산카리타스농수산물지원센터, 농협, 기타 기관 후원
3. 운영사례
 - 가정 형편, 개인사정으로 치매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가 많음
 - 남자 배우자가 돌보는 가정은 먹거리, 영양생태가 심각함
4. 개선할 점
 - 다양한 물품(특히 반찬, 간식류 등)이 필요함
 - 식품 유통기한 준수
 -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조사(전수조사) 지원대상자 선정 필요(노인맞춤돌봄생활지원사,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로당, 노노케어 등 활용)
 - 충남형 푸드 복지카드 발급 필요
 - 서산사랑카드와 연계 취약계층 지원
 - 농식품바우처 확대
 - 마을에 공동부엌 설치(장소는 경로당 활용)
 - 노인일자리(사회서비스형)을 통해 나눔냉장고 관리
 -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해당 읍면동 적용)
 - 정기적인 먹거리 취약계층 실태조사 필요(2~3년 간격)



02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 및 복지정책 방안 연구
- 과업수행계획서 -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창식 교수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 및 복지 정책 방안 연구 과업수행계획서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창식 교수

1. 연구의 필요성

- 국민 전체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빠른 고령화 추세 등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있음. 이들 취약계층의 경우 식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가 많고, 상당수가 잘못된 식생활에 의해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 정부는 영양플러스 사업, 결식아동급식지원, 노인 급식지원 사업 등 다수의 사업을 통해 식생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이 취약계층의 식품소비 증진 및 영양섭취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즉, 이러한 사업은 실제 취약계층의 식품소비와 영양섭취를 보장하지 못하는 수준이며, 생계급여 형태로 지원되는 식품비 지원금이 상당 부분 식품비 이외로 지출되고 있다고 보고됨(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이러한 건강은 식생활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나 취약계층의 경우 먹거리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먹거리 기본권과 건강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영양문제는 다음 생애주기에 지속적으로 전달되며, 후손 세대까지 영향을 미쳐 미래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잘못된 식생활에 따른 불균형한 영양섭취는 만성질환 발생을 증가시키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됨
-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은 농업과 연계한 식품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농무부에서 식생활 개선을 위한 농식품 보조 및 영양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 가구 및 영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농식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프랑스도 식품의 질 및 농업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식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김동환, 2018; 김종덕, 2009).

- 충남의 경우 홍성군 사례로 푸드통합지원 주민인식과 추진방안 연구(박상희, 2021), 홍성군 푸드플랜(김기현 외, 2019),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계획(안)(김오열, 2019), 충남 푸드플랜 수립 연구(2019), 아산시 먹거리종합계획 수립(김호, 양성범 외, 2018) 등이 있으나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함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문헌연구(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한국복지패널 자료, 학술연구 및 보고서 등), 푸드뱅크 및 마켓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충남 먹거리 복지정책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음
- 구체적으로 첫째, 국내 및 외국의 취약계층 대상 먹거리 정책 분석, 둘째, 설문조사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먹거리 실태 분석 및 먹거리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 셋째 충남형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복지정책, 넷째,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복지정책으로 광역푸드통합지원센터 및 시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제안하고자 함

3. 선행연구

1) 취약계층의 개념

- 취약계층 관련 구분과 개념은 그 정의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표 1),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의 의미는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거나, 생애 과정 중에서 발생한 예기치 않은 사고(질병, 재해, 실업·실직 등)나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위험(출산, 모령 등)에 의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과 계층을 의미함

<표 1> 취약계층 관련 개념

취약계층의 구분		개념
경제적 취약계층	빈곤층	가구의 총소득이 최저한의 필수품을 조달하기에 불충분한 집단
사회적 취약계층	생애 위험	노년, 아동, 출산여성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위험에 노출되어 경제적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집단

	사회적 약자	장애인, 이민자,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위치하여 경제적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집단
	질병/사고	질병, 산업재해, 실업/실직 등으로 예기치 않은 위험에 노출되어 경제적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집단
	사회적 배제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되지 않는 집단(사각지대)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취약계층의 객관적 정의 및 고용과 복지를 위한 정책방안.

2) 먹거리 보장의 유형과 내용

- 먹거리 보장은 단순히 절대적 측면에서의 먹거리 충분성 문제를 벗어나 적절 수준의 영향과 건강에 대한 먹거리의 영향 문제, 안전성 등 먹거리의 질적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 최저선(national minimum)의 의미함

<표 2> 먹거리 보장의 유형과 내용

구분	의미	내용	보장수준	
접근성	누가 먹거리를 제공받아야 하는가?	보편성: 공평한 접근 안정성: 지속가능한 접근 존엄성: 수용가능한 접근	개인·가구 단위	지역사회 단위
적절성	어떤 수준의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가?	적정성: 양과 질의 적절성 안전성: 안전한 먹거리 선택가능성: 개인의 기호 반영		
지속 가능성	어떤 방식으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가?	생태: 지속가능한 생산 지역사회지지: 동의와 협조 먹거리전달체계 구축		

출처: 김홍주, 이해진(2012). 한국 먹거리보장의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사회연구, 32(2), 468-499.

3) 외국의 식품지원 프로그램

- 외국의 경우 저소득층 노인, 임산부, 예비 임산부, 영 유아를 대상으로 신선 식품을 제공하여 건강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음

〈표 3〉 제 외국 식품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국가	개요
Commodity Supplemental Food Program (CSFP)	미국	보충 식품 제공 프로그램인 CSFP은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보충 식품을 제공하여 전반적인 건강 향상 목적. 2016년 매달 585,000여명 수혜. 무지방 우유, 주스, 오토, 인스턴트시리얼, 쌀, 파스타, 땅콩버터, 마른콩, 통조림육류, 가금류 제공
Food Distribution Program on Indian Reservations (FDPIR)	미국	인디언 보호 구역에 거주하며 소득 기준에 부합하거나 보호 구역 주변 혹은 오클라호마에 거주하는 아메리칸 인디언 가정에 식품 제공. 냉동 소고기, 훈제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통조림 육류, 가금류, 생선, 통조림 생선, 야채, 콩 수프, 스파게티 소스, 파스타, 시리얼, 쌀, 기타 곡물, 치즈, 달걀, 저지방 우유, 무지방 우유, 연유, 밀가루, 옥수수 가루, 베이킹 믹스, 크래커, 마른 콩, 말린 감자, 주스, 말린 과일, 땅콩, 땅콩 버터 등 제공
The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 (TEFAP)	미국	저소득층과 노인에게 필수 식량 무료 제공. 통조림 과일, 통조림 야채, 과일 주스, 말린 계란 믹스, 육류/생선/가금류, 말린 콩, 면류, 우유, 쌀/시리얼, 수프 등 80여 종 식품 제공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미국	임산부, 예비 임산부 그리고 영 유아의 건강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주스, 우유, 아침 식사용 시리얼, 치즈, 계란, 과일과 야채, 통곡 빵, 통조림 생선, 말린 야채 혹은 통조림 야채 혹은 땅콩버터 등 식품패키지 제공
Senior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SRMNP)	미국	농업 종사 저소득 노인의 식품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60세 이상, 가정 내 수입이 국가 수입 기준의 185%에 미치지 못 하는 저소득층 노인 대상 농장, 길거리 판매대, 농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지역 단체에서 지정된 식품 구매 가능
Elderly Nutrition Program (ENP)	미국	독립성이 낮은 노인을 대상으로 가능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가정으로 식사 배달 서비스 시행
Healty Start scheme	영국	영국의 건강행정부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는 국가 프로그램으로 임산부와 영아 대상 쿠폰을 이용하여 지역 상점에서 우유, 신선 과일·채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우유와 조리되지 않은 신선한 과일 및 야채만 구입할 수 있음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8). 서울시 먹거리 보장 구현을 위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 연구.

4) 국내의 저소득층 대상 먹거리 지원 사업

○ 중앙정부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지원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런 서비스의 일부로 식생활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노인을 대상으로 바우처, 단체급식, 도시락배달, 양곡할인 등의 식품지원 프로그램과 대상자의 생계를 위한 현금 제공 등이 해당됨
- 또한,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학생에게 무상으로 우유 급식을 제공하고 있음

○ 국민의 건강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식생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식생활 지원프로그램의 기본 목표는 식생활 보장을 통한 국민의 건강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이며, 중앙 및 지방정부는 임산부,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을 대상으로 영양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신선한 제철과일 및 채소를 활용한 간식과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유아, 임산부, 출산 및 수유 여성 중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보충식품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과일바구니 사업은 신선한 제철과일과 채소를 어린이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 실버건강 식생활사업은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식생활관리서비스와 간식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중앙 및 지방정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경로식당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급식 형태의 식사지원 서비스와 도시락배달 및 반찬 배달 서비스가 운영

- 지방정부는 공공급식 운영 체계를 조례를 통해 관리하고 있고, 공공급식 지원 체계가 대부분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범위로 하고 있으나, 노인급식 등의 공공급식의 경우 체계적인 관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5) 정책적 대안

(1) 정책적 대안으로 푸드플랜,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음

- 푸드시스템은 농산물이 생산되어 최종 소비 또는 폐기되기까지 거치는 일련의 과정으로 생산 및 수확, 저장, 가공, 포장, 운송, 소비, 폐기 등을 포괄하는 시스템임. 커뮤니티 푸드시스템은 먹거리를 매개로 지역경제, 지역사회, 건강, 환경 등 공동체에 중요한 영향을 받는 사회체계로서의 푸드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지칭(박상희, 2021).
- 푸드플랜은 과거 대량생산·대량소비에 기반한 산업형 푸드시스템을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형 푸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임. 즉, 자본 중심의 산업적 먹거리 생산·공급체계에서 지역공동체 기반의 먹거리 순환체계로 전환시키는 계획이며 먹거리를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과 사업을 포함하는 먹거리 공공영역에서의 포괄적인 대응 전략(김종완, 2018).

(2) 농식품부도 지역 푸드 플랜의 기본 체계 수립을 위한 노력 중임(그림 참조)



<그림 1> 지역 푸드플랜의 기본체계(안)

출처: 농식품부(2017). 2017푸드 플랜사업 추진방향

(3) 국가단위 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정책 개발이 진행 중임(그림 참조)

〈그림 2〉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단계별 주요 내용 및 대상(안)

1단계	2단계	3단계
먹거리 접근성 먹거리 양적 욕구 충족 - 무료 급식 - 도시락 배달 - 기부식품 제공 취약계층 지원 인프라 활용 - 기존 지역: 경로식당, 푸드마켓 등 기존 인프라 활용 서비스 대상 확대 - 신규 지역: 푸드마켓 + 도시락 배달 등 지역 내 먹거리 지원 체계 구축 취약계층 - 먹거리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상	먹거리 적절성 먹거리 질적 욕구 충족 - 유기농 식자재 공급 - 지역 먹거리 제공 - 공유식당 등 먹거리 체험 확대 공유식당 등지역인프라활용 - 공유식당: 지역 내 식자재 및 조리 시설 공유를 통해 다양한 먹거리 체험 - 지역 내 생산되는 잉여 유기농 식자재 공유 및 저렴가격 공급(바우처와 연계) 취약계층 + 차상위 - 안전한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대상	먹거리 지속가능성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 지역 내 먹거리 공급-소비 체계 구축 - 로컬푸드 체계 구축 지역 로컬푸드 계획과 연계 - 로컬 푸드 체계와 연계: 로컬푸드 및 계획생산체계 등을 통한 안정적 지속적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 - 공공급식체계를 활용한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 취약계층 + 차상위 + 일반 - 먹거리 안전성 및 지속성 확보
◀북지국 : 취약계층 지원▶		농정해양국 : 경기도 먹거리 기본 계획

출처: 경기복지재단(2019). 마을단위 취약계층의 안전한 먹거리 지원 방안 연구

(4) 지역단위에서 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먹거리 제공을 위한 사업이 추진 중임. 전주시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화성시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조례로 지정하고 현재 운영중임

〈표 4〉 푸드통합지원센터 역할(예시)

구분	주요 추진 내용 예시
지역농업의 생산재편	소량 자품종 기반 기획생산 체계 강화 중소농/가족농/고령농/여성농/귀농 귀촌자 육성 환경농업 전환 촉진 지원
농민가공 촉진	가공부가가치 농가 환원 및 로컬푸드 품목 다각화 농민가공 종합 인큐베이팅 (교육, 시제품, 제조허가 등) 거점가공시설 구축 및 운영
관계시장 창출	학교급식, 공공급식, 단체급식, 직매장 등 농산물 안정성 및 품질 관리
통합적 물류 기능	순회수집·저장·가공·선별·포장·저온물류시스템 등
생산-소비 간 소통 및 신뢰강화	식문화 교육,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소비가 생산현장 팸투어 등
민관협력 컨트롤 타워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모델 수립, 적용 정책지원사항 발굴 및 제안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8)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설립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대내외 의견을 수렴하면서 설립을 준비함. 민-관 설립 공감대속에서 우선적으로 센터 설립 및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 내부 T.F.를 구성하여 재단 설립을 추진함과 동시에 직매장 개설 준비와 생산지 조직화 교육 등 실무 준비 작업을 병행함. 2017년 9월 전주학교급식지원센터로 지정되면서 전주시 내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관련 농가의 조직화를 추진.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밥상 제공, 안정적 농가소득 창출로 지속가능한 농업 영위, 지역생산·지역소비의 선순환 구조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주요 경영 목표.
-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경우, 2006년 화성시 농산물사업단 T.F.팀을 구성하고 화성시 농산물유통지원조례를 제정. 2007년 화성시농산물유통산업단을 설립하였고 2011년에 화성시 농산물 유통사업단이 사단법인으로 변경하였으며, 2016년에는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출범. 생산자와 소비자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농산물 유통 환경 개선, 농산물 브랜드 파워 강화를 통한 농가 수취 가격 증대, 안정적인 지역 농산물 유통 기반 확립으로 농업 기반 구축이 주요 설립 목적임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 외국문헌, 외국 도시 및 기관의 홈페이지, 국내 문헌 및 도시 및 기관의 홈페이지, 학술논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서 등 대상
- 내용: 먹거리 실태, 국내 및 외국의 취약계층 대상 먹거리 정책 등

2) 설문조사

(1) 조사대상

- 충남의 결식아동(설문지 이해가 가능한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750명
- 충남의 장애인 250명
- 전체 1,000명

(2) 표집방법:

- 15개 시군, 시군별 67명을 임의표집하여 설문조사
- 지역을 하나의 집단으로 하여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지역별 균등 표집을 하고자 함

(3) 자료수집방법

- 결식아동 및 독거노인들이 이용하는 충남 15시군의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용
-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담당자에게 설문지 취지 및 요령을 설명하고, 방문하는 저소득층 아동 및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요청하도록 부탁. 설문 종료 후 2,000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
- 장애인의 경우 서산시장애인복지관, 홍성군장애인복지관, 당진시장애인복지관 등 3기관에 방문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설문지 회수가 늦어질 경우 노인복지관, 무료경로식당 및 지역아동센터를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
- 설문기간은 배포 후 2주일 간

(4) 설문내용

- 설문지는 어르신용과 아동용 2개의 설문지 제작
- 설문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5> 설문내용

영역	어르신 및 장애인	아동
먹거리 실태	- 식사 결식 정도(평일, 주말, 주일) - 결식 이유 - 결식에 대한 불안감 - 과일과 채소의 신선한 정도 - 음식의 안전성 - 푸드뱅크 또는 푸드마켓 이용 실태 - 경로무료식당 이용 - 도시락 배달 이용	- 식사 결식 정도(평일, 주말, 주일, 방학중) - 아침 결식 이유 - 결식에 대한 불안감 - 과일과 채소의 신선한 정도 - 음식의 안전성 - 학교급식 이용 실태 - 지역아동센터 이용 실태
먹거리 사업의 성과	- 건강권 확보(푸드뱅크, 경로무료식당 등 이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	- 건강권 확보(학교급식 및 지역아동센터 제공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
정책에 대한 의견	- 공유식당, 공유부엌, 푸드 바우처 이용에 대한 의견 - 먹거리 지원센터의 설립·운영(푸드통합 지원센터) - 공공급식체계 개선 - 대중식당 운영	- 학교에서 아침식사 제공에 대한 의견
일반사항	- 성별 - 연령 - 거주지(시군, 읍면동)	- 성별 - 연령 - 거주지(시군, 읍면동)

3) F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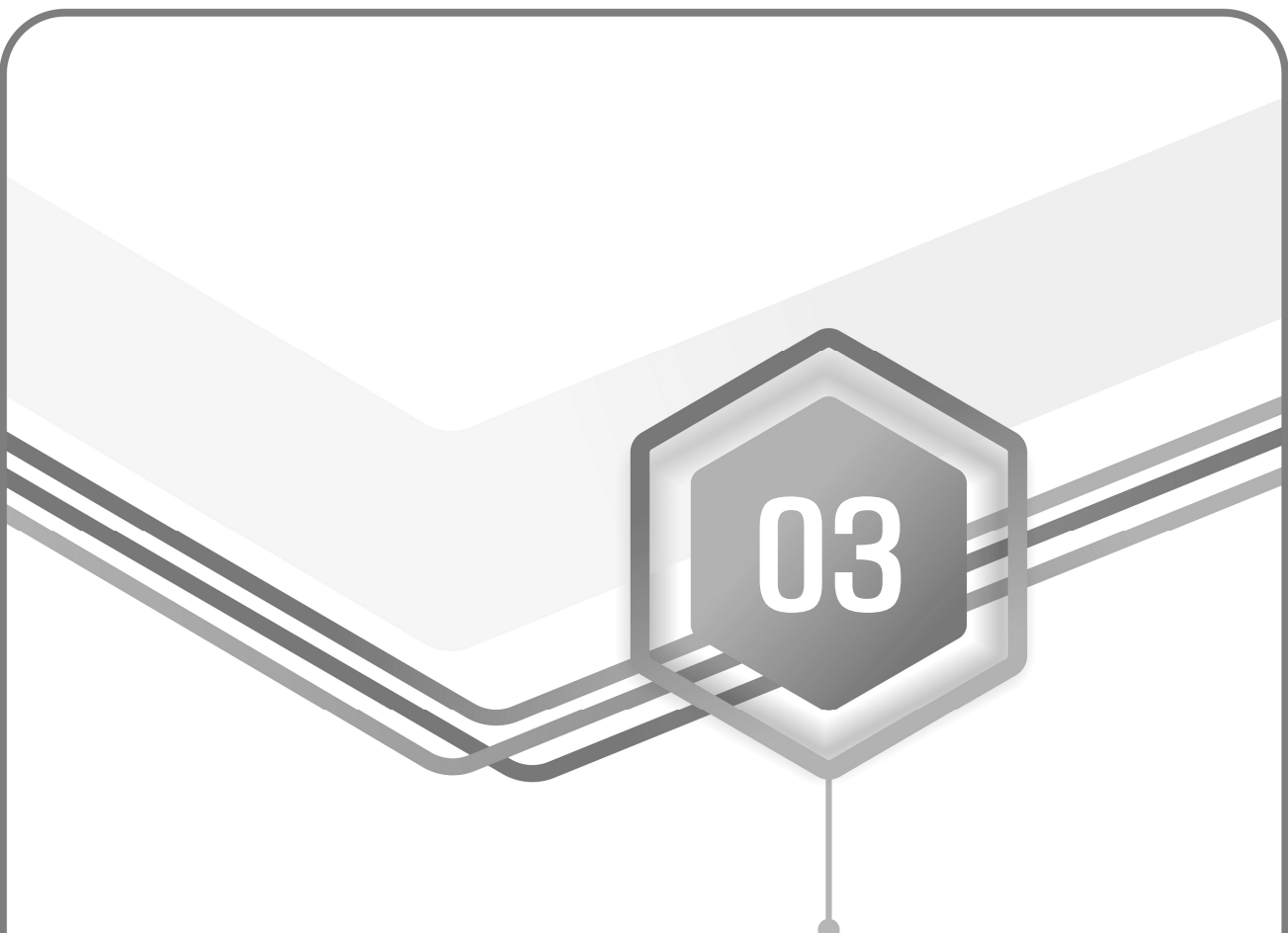
- 대상: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회복지보장협의체, 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 먹거리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 5인
- 내용: 먹거리실태, 전달체계, 정책 등 방안에 대한 인터뷰
- 방법: 인터뷰, 녹취, 내용 분석
- 시기: 10월 초

4) 자문회의

- 자문위원: 취약계층 건강과 먹거리 복지정책의 발전 방향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위원 중 5인
- 자문내용: 연구진이 개발한 충남 먹거리 복지 정책(안)에 대한 자문
- 자문방법: 자문회의
- 시기: 11월 말

5. 연구수행 일정표

구 분	1월차	2월차	3월차	4월차
착수보고회				
문헌조사 및 설문지 제작				
FGI				
먹거리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먹거리 복지 선진국에 대한 문헌조사				
먹거리 복지모델(안) 개발 및 자문회의를 통한 보완				
중간보고서 초안 작성				
중간보고회 및 보완				
최종보고회				
연구용역보고서 최종 검토 및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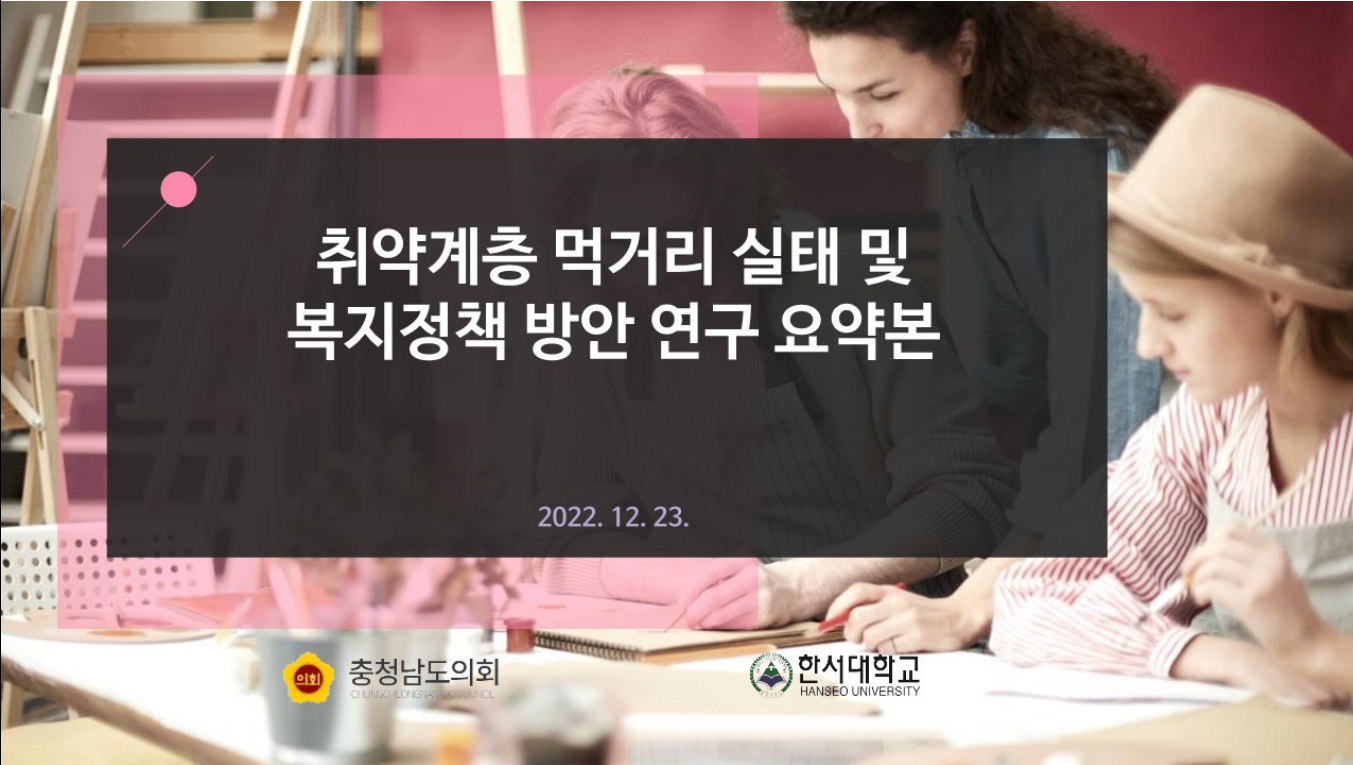


03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 및 복지정책 방안 연구
- 최종 보고 자료 -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창식 교수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 및 복지정책 방안 연구 요약본

2022. 12. 23.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한서대학교
HANSEO UNIVERSITY

목차

- I. 연구목적
- II. 연구방법
- III. 연구결과
 - 1. 문헌연구 결과
 - 2. 설문조사 결과
 - 3. FGI 결과
- IV. 제언



I. 연구목적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문헌연구(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한국복지패널 자료, 학술연구 및 보고서 등), 푸드뱅크 및 마켓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장애인 대상 설문조사, 먹거리 복지 전문가 대상 FGI를 통하여 충남 먹거리 복지정책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음
- 구체적으로 첫째, 국내 및 외국의 취약계층 및 장애인 대상 먹거리 정책 분석, 둘째, 설문조사를 통하여 취약계층 및 장애인의 먹거리 실태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셋째 충남형 취약계층 및 장애인을 위한 먹거리 복지정책 개발 및 제언



Ⅱ. 연구방법

연구방법

1. 문헌연구

- 외국문헌, 외국 도시 및 기관의 홈페이지, 국내 문헌 및 도시 및 기관의 홈페이지, 조례, 학술논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서 등 대상
- 내용: 먹거리 실태, 국내 및 외국의 취약계층 및 장애인 대상 먹거리 정책 등

2. 설문조사

1) 조사대상

- 충남의 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750명, 충남의 장애인 250명 등 전체 1,000명

2) 표집방법

- 소외계층은 15개 시군별 각 50명을 임의 표집, 전체 750명
- 장애인은 서산시(100명), 홍성군(75명) 및 아산시(75명) 3개 시군에서 250명 임의 표집

연구방법

3) 자료수집방법

- 소외계층 대상 설문조사는 충남 15시군의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담당자에게 설문의 취지 및 요령을 설명하고, 방문하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설문을 요청하도록 부탁. 설문 종료 후 2,000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
- 장애인의 경우 서산시장애인복지관, 홍성군장애인복지관, 아산시장애인복지관 등 3기관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설문의 취지 및 요령을 설명하고, 방문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요청하도록 부탁. 설문 종료 후 2,000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
- 설문기간은 배포 후 2주일 간

4) 설문내용

- 설문지는 소외계층용과 장애인용 2개의 설문지 제작
- 설문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연구방법

<표> 설문내용

영역	소외계층	문항 수	장애인	문항 수
먹거리 실태	• 식사 결식 이유 및 빈도 • 결식에 대한 불안감 • 신선한 채소와 과일 드시는 빈도 • 혼자 식사준비 가능 정도 • 식사 도움 정도 • 적합한 식사 유형	2 1 2 1 1 1	• 식사 결식 이유 및 빈도 • 결식에 대한 불안감 • 신선한 과일과 채소 드시는 정도 • 혼자 식사준비 가능 정도 • 식사 도움 정도 • 적합한 식사 유형	2 1 2 1 1 1
먹거리 지원 서비스 이용	• 먹거리 지원서비스 이용 빈도(반찬배달, 도시락배달, 무료 급식, 기부식품제공, 식품구매권, 행복꾸러미, 건강과일바구니, 경로당무료식사, 식품조리교육) • 먹거리 지원 서비스 시설의 접근성(푸드뱅크, 푸드마켓, 나눔냉장고, 공유부엌, 공유식당, 경로식당) • 먹거리 지원서비스의 적합성	9 6 1	• 먹거리지원서비스 이용 빈도(반찬배달, 도시락배달, 무료 급식, 기부식품제공, 식품구매권, 행복꾸러미, 건강과일바구니, 식품조리교육) • 먹거리 지원 서비스 시설의 접근성(푸드뱅크, 푸드마켓, 나눔냉장고, 공유부엌, 공유식당) • 먹거리 지원서비스의 적합성	8 5 1
먹거리 복지 정책	• 먹거리 지원 서비스 내실화 방안 • 먹거리 지원 서비스의 도움	1 1	• 먹거리 지원 서비스 내실화 방안 • 먹거리 지원서비스의 도움	1 1
일반사항	• 성별, 연령, 월수입, 동거인, 장애유무, 거주지역, 거주시군	7	• 성별, 연령, 월수입, 동거인, 장애정도, 활동지원사도움 • 여부, 거주지역, 거주시군	8
계		33		30

연구방법

3. FGI

- 1) 대상: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회복지보장협의체, 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먹거리 및 복지 전문가 6인
- 2) 내용: 먹거리실태, 전달체계, 먹거리 정책
- 3) 방법: 인터뷰, 녹취, 내용 분석을 활용
- 4) 일시: 2022년 11월 7일 10시 30분 ~ 12시 00분
- 5) 장소: 서산시자원봉사센터 다목적실

구분	질문내용
시작 질문	- 인터뷰 전 인사 - 인터뷰의 목적, 방법 및 소요시간 등에 대한 안내
주요 질문1	소외계층 및 장애인의 먹거리 실태는 어떠한지?
세부 질문	- 양적 측면, 하루 세끼 식사는 충분한지? - 질적 측면, 식사의 영양 정도는 충분한지? - 신선한 채소 및 과일 등 드시는지? - 장애인은 어떠한지?
주요 질문2	소외계층 및 장애인을 위한 먹거리 전달 방법은 문제가 없는지?
세부 질문	- 반찬 및 식사(도시락) 배달은? - 무료급식은? -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은? - 식품구매권? - 나눔 냉장고는? - 행복꾸러미와 건강 과일 바구니는? - 장애인은 어떠한지?
주요 질문3	현재 소외계층 및 장애인 대상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먹거리 정책은?
세부 질문	- 문제점은? - 개선방안은? - 장애인 먹거리 정책은?
주요 질문4	소외계층 및 장애인 대상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먹거리 정책에 포함해야 할 먹거리복지정책이 있다면?
세부 질문	- 복지정책 대상은? - 정책 내용은?
마무리 질문	- 지금까지 충청남도 먹거리 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음 - 충청남도 먹거리 정책을 위해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Ⅲ. 연구결과

문헌연구 결과

1. 취약계층의 개념

- 취약계층 관련 구분과 개념은 그 정의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의 의미는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거나, 생애 과정 중에서 발생한 예기치 않은 사고(질병, 재해, 실업·실직 등)나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위험(출산, 고령 등)에 의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과 계층을 의미함

2. 먹거리 보장의 유형과 내용

- 먹거리 보장은 단순히 절대적 측면에서의 먹거리 충분성 문제를 벗어나 적절 수준의 영양과 건강에 대한 먹거리의 영양 문제, 안전성 등 먹거리의 질적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 최저선(national minimum)을 의미함
-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인권, 불평등 해소 등이 강조되고, 먹거리의 “공공재”적인 성격이 대두되면서 정책대상이 “모든 시민” 혹은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고, 국가 혹은 광역 단위의 먹거리 보장 관련 사업 추진(이수행, 박정지, 2019)

문헌연구 결과

3. 취약계층의 먹거리 실태

- 전국을 기준으로 ‘1일 1회 이상 결식 경험’ 현황을 보면, 2015년 34.63%에서 2017년 34.98%, 2019년 37.37%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질병관리청, 2015; 2017; 2019)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먹거리 부족을 경험한 비중을 보면, 2015년 5.02%에서 2017년 2.57%, 2019년 1.80%로 해마다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먹거리 취약계층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줌(질병관리청, 2015; 2017; 2019)
- 도시와 농촌의 결식 수준을 비교한 결과, 2019년 기준 도시민은 86.8%, 농촌주민은 13.2%로 나타나, 도시지역 결식률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질병관리청, 2019). 결식률을 광역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결식률이 26.7%로 가장 높으며, 서울시(18.6%), 경남(7.0%), 부산시(6.6%), 인천시(6.5%), 대구시(5.1%), 경북(4.6%) 등의 순으로 나타남(질병관리청, 2019)

문헌연구 결과

- ‘식비부족 경험비율’을 도시지역(동)과 농촌 지역(읍/면)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2019년 기준 도시민의 79.8%, 농촌주민의 20.2%가 식비부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3배 이상 높음(질병관리청, 2019). 1분위 계층에서 경제적으로 “가끔 먹거리가 부족하다”(60.0%)와 “자주 부족하다”(68.0%)는 비중이 높고, 이들은 전체 먹거리 부족자의 61.6%에 달함
- 식비가 부족하여 먹을 것이 떨어진다는 비율 또한 소득 1분위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자주 떨어진다(52.9%)와 가끔 떨어진다(56.4%) 등 식비 부족자는 전체 먹거리 부족 계층의 55.7%로 나타남(질병관리청, 2019)

4.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지원

- 1) 국내 취약계층 대상 먹거리 지원 관련 법률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먹거리 지원 관련 법률을 선행연구와 법제처의 관련 법을 조사하여 분석함

문헌연구 결과

- ‘국민기초생활제도(생계급여)’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생계급여로 지급하는 제도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재산기준을 충족한 취약계층에게 현금으로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기부식품 등 제공은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기부식품 제공이 필요한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함. 지원방식은 대상자가 푸드마켓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 등을 선택, 수령하거나 푸드뱅크가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식품 등을 제공
- 정부 양곡 할인 지원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 구입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9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 할인, 생계급여 수급자 매월 지급되는 현금급여에서 양곡대금 공제하는 제도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하여 택배 배달함
- 우유 무상 급식 지원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수 교육대상자에게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제도

문헌연구 결과

-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제도는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 중 산모의 질병,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기관·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 가정의 아동, 기준 중위소득 40%인 취약계층에게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조제분유를 구매하는 제도
- 아동급식 지원제도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소년소녀가장 아동, 한부모가족 아동, 장애인 보호자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아동, 보호자 부재 아동, 긴급보호 필요 아동, 맞벌이 가구 아동, 위원회 지원 아동,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이용 아동, 장애인 보호자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음식점 이용(급식카드사용),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편의점 급식, 부식 배달 등을 지원하는 제도
- 노인급식 지원제도는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저소득 혹은 결식 우려 노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의 60세 이상 거동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식당 단체급식, 재가노인 식사 배달,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 식사 무료 제공하는 제도

문헌연구 결과

2) 국내 취약계층 대상 먹거리 지원 관련 조례

(1) 충청남도 이외 지역의 취약계층 먹거리 관련 조례

- 충청남도를 제외한 도시군의 취약계층 먹거리 관련 조례는 45개가 검색되었으며, 이중 경기도 13개 도시군, 전라북도 7개 시군이 검색되었음
- 조례분석 결과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가 가장 많았으며, 먹거리 기본조례에 일부 취약계층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다음으로 공유주방이 많았는데, 주로 1인 가구 지원 조례와 청년지원 조례에 명시되었음

문헌연구 결과

(2) 충청남도 및 시군 취약계층 먹거리 관련 조례

- 자치법규시스템을 활용하여 충청남도 및 충남 시군의 취약계층 먹거리 관련 조례를 검색함. 검색어는 취약계층, 소외계층, 먹거리, 공유주방, 마을부엌, 마을밥상, 행복꾸러미, 공동조리, 나눔냉장고, 공유냉장고, 방문식사, 거점배달, 커뮤니티키친, 지역먹거리위원회, 온마을사랑채, 새뜨락커뮤니티센터·만덕어울림, 공유경제, 오픈키친/요리 스튜디오, 공유주방/클라우드 키친, 센트럴 키친 등이었음
- 충청남도 및 시군의 취약계층 먹거리 관련 조례는 6개가 검색되었으며, 이중 충청남도, 당진시, 부여군, 서산시, 태안군 및 홍성군에서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및 공유주방이 명시되어 있었음
- 충남도의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는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농업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도민들이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더 행복한 충남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보장 관련 조례로 간주할 수 없음

문헌연구 결과

- 충남의 15개 시군 중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청양군, 예산군은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음. 반면 시군별 먹거리 실태조사 결과 식비가 없어서 식사를 못 한다는 응답은 금산군이 높았고, 결식에 대한 불안은 천안시와 아산시가 높았으며, 과일을 거의 섭취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서천군이 높았음. 또한 혼자서 식사준비가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은 보령시가 높았으며, 도움을 받아서 식사한다는 응답은 서천군이 가장 높았고, 적합한 음식으로 연하 및 도움식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천안시가 가장 높았음.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취약계층 관련 조례가 없는 시군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먹거리 지원 서비스의 요구가 높은 시군과의 유사성이 나타남

설문조사 결과

1. 취약계층의 먹거리 실태

- 평소 식비가 없어 식사를 못하거나 식사 준비가 어려워 식사를 못하는 취약계층이 다수 있어 이들을 위한 먹거리 돌봄이 필요함
- 결식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식사 돌봄 서비스 지원방안이 필요함
- 신선 채소와 과일을 먹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다수이며, 이들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생산되는 신선 채소 및 과일의 제공 방안 마련 필요함

설문조사 결과

- 혼자서 식사 준비가 가능하지 않다는 취약계층이 다수임. 이들을 위한 식사배달 및 반찬 배달의 먹거리 서비스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식사 시 가족이나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서 식사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식사돌봄 방안 마련 필요
- 치료식과 연하 및 삼킴 도움식이 적합한 취약계층에게 이러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취약계층은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다른 먹거리 지원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았음. 따라서 대상별 맞춤형 먹거리 지원 서비스 방안 마련 필요함
- 취약계층이 가까이 있어 이용하는 시설은 푸드뱅크, 푸드마켓이었음. 그러나 푸드뱅크, 푸드마켓은 시군에 한 곳만 있어 접근성이 높은 편도 아닌 점을 고려한다면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동마켓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취약계층이 가장 선호하는 먹거리 지원 서비스는 배달 반찬/식사인데,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배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설문조사 결과

- 먹거리 지원 서비스의 내실화 방안으로 쉽게 이용 가능한 시설 확대 요구가 가장 높아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먹거리 지원 서비스가 취약계층의 건강에 큰 이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마을에서 생산된 신선 식재료를 활용한 먹거리 지원 필요함

2. 장애인 먹거리 실태

- 장애인 중 평소 식비가 없어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 필요
- 식사준비가 어려워 식사를 거르는 장애인이 있어 이들을 지원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결식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 필요함
- 신선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어 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신선 채소 및 과일의 규칙적인 지원 방안 필요함

설문조사 결과

- 혼자서는 식사준비가 불가능한 장애인이 다수 있어 이들을 발굴하고 식사 준비 지원 또는 배달 식사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장애인이 식사 시에 도움을 받아야 식사가 가능하므로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치료식이나 연하 및 삼킴 도움식이 적합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장애인은 푸드뱅크, 푸드마켓 및 나눔냉장고를 많이 이용하고 이들 시설은 접근성이 높은 시설임. 이러한 시설들이 장애인에게 조금 더 가까이 있도록 먹거리 서비스 시설 확대 필요
- 장애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먹거리 지원 서비스 유형은 배달 반찬/식사이므로 이를 지원할 방안 필요
- 장애인의 먹거리 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쉽게 이용 가능한 시설 확대이므로 먹거리 서비스 시설과 복지 통합된 통합적 복지 및 먹거리 돌봄 방안 필요
- 먹거리 지원 서비스가 장애인의 건강에 도움이 되므로 이를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FGI 결과

3. FGI 분석 결과

질문	결과	비고
주요 질문1. 소외계층 및 장애인의 먹거리 실태?	박00 • 독거노인 대부분 세 끼에 대한 의지부족 • 하루 두 끼 정도 챙겨드시지만 식사에 대해 소홀함 • 경로당에서 점심식사를 의존하는데 코로나로 인한 경로당폐쇄로 규칙적인 식사 불가능 • 식사의 질 문제 심각 • 신선한 채소, 과일 섭취 거의 불가능 • 여인숙 거주 분들은 조리기구가 없어 배식 받는 음식만 섭취함. 화재위험으로 찬 음식이 대부분임 이00 • 예산 부족 •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식단 필요 이00 • 장애인의 신선한 채소 섭취 어려움 • 좋아하는 음식을 드리려고 해도 거리 문제로 받아가지 못함 김00 • 영양식지원, 단기사업으로 취약계층 밀키트 지원 중 • 자원봉사 측에서 밥차 현장배식은 외식하는 분위기 등을 느낄 수 있고, 새로운 음식을 접할 기회가 될 수 있음 • 도시락 배달을 통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주방에서 직접 만드는 음식을 드실 수 있으며 도시락 전달을 통해 생사여부 파악가능	

FGI 결과

질문	결과	비고
주요 질문2. 소외계층 및 장애인을 위한 먹거리 전달 방법?	이00 • 나눔 냉장고의 대상선정과 지급방법 문제로 인해 논란이 많음 •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춰 조절 필요 박00 • 중복지원 문제를 위한 데이터 공유 필요 한00 • 시스템에 대한 체계화와 협업 필요 • 전문 코디 육성	
주요 질문3. 현재 소외계층 및 장애인 대상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먹거리 정책 실태는?	이00 • 단일화 필요 • 대상별 영양 평가 파악 필요 한00 • 컨트롤타워 필요 • 욕구조사를 통한 식품구매권 시행 필요 이00 • 장애인을 위한 이동차량 필요	

FGI 결과

질문	결과	비고
주요 질문4. 소외계층 및 장애인 대상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먹거리 정책에 포함해야 할 먹거리 복지 정책?	박00	
	- 로컬 푸드 재활동 필요 - 학교급식센터 채소류 지원 예산 1% 추가 구매로 위약계충을 위한 신선아채공급방식 지원 필요	
	이00	
	- 봉사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급식센터 필요	
	이00	
	- 소외계층 먹거리 지원을 위한 식품구매권 활용 - 찾아가는 서비스인 이동마켓 운영 필요	
	이00	
	- 공동 부엌 필요 - 마을회관 부엌 등을 활용하여 반찬 만들기를 할 수 있는 공간마련 필요	
	한00	
	서류상의 문제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해결 필요	
	이00	
	행정과 봉사자들의 협업 필요	
	김00	
	- 역량지원이 가능한 시스템 운영 - 무료급식소 확대 운영 - 대상에 대한 정확한 조사 필요 - 위생적 공간 마련	

IV. 제언

제언

1.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안)에 먹거리돌봄을 포함

- 모든 돌봄 활동의 기본이 되는 영역이 먹거리임. 식사와 영양관리 서비스 효과는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과 같은 정서적 건강수준도 크게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됨. 따라서 돌봄 중에서 먹거리 돌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필요 있음
- 현재 ‘지역사회통합돌봄법률’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2건의 법안(정춘숙 의원, 전재수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에 제출된 상태임. 현재 법안은 ‘보건의료이동지원 서비스, 재활치료 서비스, 장기요양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주거지원 서비스’만을 규정하고 있음

제언

1.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안)에 먹거리돌봄을 포함

- 모든 돌봄 활동의 기본이 되는 영역이 먹거리임. 식사와 영양관리 서비스 효과는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과 같은 정서적 건강수준도 크게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됨. 따라서 돌봄 중에서 먹거리 돌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필요 있음
- 현재 ‘지역사회통합돌봄법률’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2건의 법안(정춘숙 의원, 전재수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에 제출된 상태임. 현재 법안은 ‘보건의료이동지원 서비스, 재활치료 서비스, 장기요양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주거지원 서비스’만을 규정하고 있음

제언

- 미국의 경우 실업자 및 저소득층 대상 긴급 식량 지원 프로그램(The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을 통하여 굶주림을 해결하고 있음
- 따라서 긴급대상자를 대상으로 먹거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이의 제도화가 필요함. 즉, 긴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긴급 신청을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진단하고 지역의 먹거리 서비스를 관리하는 기능을 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안)에서 식재료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하여 긴급을 요하는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지원할 필요있음

3. 먹거리 돌봄 서비스가 지역 먹거리 체계(푸드플랜) 내에서 일부 운영 제도화

- 취약계층이 신선 채소를 “거의 먹지 못한다”는 응답이 34.6%(234명), “전혀 먹지 못한다”는 응답은 4.6%(31명)이었고, 신선 과일을 “거의 먹지 못한다”는 응답이 42.9%(289명), “전혀 먹지 못한다”는 응답은 6.7%(45명)이었음. 장애인은 신선 채소를 “전혀 먹지 못하거나 거의 먹지 못하는” 응답은 27.0%(62명)였고, 신선 과일을 “전혀 먹지 못하거나 거의 먹지 못하는” 응답은 38.5%(89명)로 나타남

제언

- 한편 푸드플랜은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Food System,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전략으로, 산업형 푸드시스템(대량생산·대량소비)을 생태순환적인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함을 의미함.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은 생산-유통 및 가공-소비-폐기의 먹거리 선순환 시스템과 식품에 대한 영양, 접근성, 안전과 분배와 관련된 ‘먹거리 정의 및 공공성’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 및 기초 지자체 등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는 부분임. 정책의 영역에서 푸드플랜은 ‘먹거리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먹거리의 생산과 공급, 영양개선, 안전관리, 식생활 교육, 환경보전 등 관련된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계획’을 내용으로 함
- 따라서 푸드플랜 내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 채소와 과일이 취약계층 및 장애인에게 공급되도록 충남도 및 시군이 명문화하고, 공급의 방법은 식품 이용권을 활용하는 방안이나 과일 및 채소 꾸러미를 이용하는 방안 마련 필요함

제언

4. 먹거리 지원이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안)’ 구축

- 복지 및 먹거리 전문가 대상 FGI에서 사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함
- 주민자치센터, 지역사회 복지기관, 자원봉사·시민사회단체, 식생활교육 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이 먹거리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상의 중복, 사업의 중복 및 연속성 부족 등으로 사업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따라서 먹거리 지원사업이 지속성, 연속성 및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지역사회 복지기관, 사회경제 조직, 자원봉사·시민사회단체, 식생활교육 단체, 보건 의료기관 등 먹거리 돌봄 영역에서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안)’를 구축하고 이 센터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필요 있음

제언

5. 마을회관에 공유 부엌 설치(Community Kitchen) 지원 제도화

- 취약계층 및 장애인 모두 먹거리 지원 서비스의 내실화 방안으로 쉽게 이용 가능한 시설 확대를 요구함
- FGI에서 공유 부엌/공유 식당 등 음식을 조리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간 확충 방안 모색 필요함을 제기
- 한편 공유 부엌은 기능적 특징에 따라 나눔 부엌이나 나눔 밥상, 공동주방, 공동 식탁 등으로 불리기도 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나 화합의 의미를 드러내는 이름 또는 사회적·문화적 기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소셜 다이닝, 커뮤니티 키친 등으로 부르기도 함. 공유 부엌은 단지 주방을 공유하고 식사하는 행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대화와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나아가 창업 인큐베이팅을 위한 지식까지 공유하는 활동이 가능한 곳임(장상은, 정경운, 2018)
- 마을회관은 대부분 마을 입구나 전면에 위치하며, 자치적 집회소로서의 기능과 마을 공동재산의 운영 및 관리 기능, 그리고 마을 행정의 중심으로서 말단 행정적 기능을 수행함

제언

- 마을회관에 공유 부엌을 설치하여 마을 주민 및 자원봉사자가 마을에서 생산된 식재료로 식사 및 반찬을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배달도 가능하며 매일 1회 이상을 운영할 필요 있음. 이러한 운영을 위하여 비용문제, 공간확보 문제, 매일 식사준비, 인력 문제 등의 해결이 필요함. 따라서 충남도와 시군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공유 부엌 내에 나눔 냉장고를 설치하여 마을 주민이 잉여 식재료를 나눔 냉장고에 넣어두고 필요로 하는 주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 및 장애인의 먹거리 보장에 한단계 더 높이 기여하도록 함

6. 이동 마켓 운영지원 제도화

- FGI에서 먹거리 지원 서비스와 함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대상에 대한 이동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찾아가는 서비스인 이동 마켓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음

제언

- 선행연구에 의하면 ‘로컬푸드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비만, 당뇨, 조기사망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Deller et al., 2017). 따라서 이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및 장애인에게 신선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이동 마켓을 운영할 경우 이들의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 등에 큰 도움이 됨
- 한편 식재료 구입이 어려운 마켓이 없는 지역은 식품빈곤지역에 해당되는데, 식품빈곤지역(식품 사막: Food Deserts)은 미국 농무부의 Thrifty Food Plan(적절한 영양을 공급하는 식품과 섭취량을 정해놓은 플랜)에 명시된 과일과 야채 등의 식재료들을 반경 2km 이내의 어떠한 마켓에서도 구입할 수 없는 지역을 지칭함(Rose et al., 2009).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시설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선한 식품을 사는 데에 제약이 따름(Herrera, 2011). 이에 오바마(Michelle Obama) 정부는 식품빈곤지역(Food Deserts)에 개업하는 소매업체에게 세금우대조치를 취함으로써 2017년까지 식품빈곤지역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수행하였음
- 한국의 농촌 등 마켓이 없는 지역과 거동이 불편하여 푸드 마켓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및 장애인을 위하여 이동 마켓 운영이 필요함. 이동 마켓은 이동거리, 대상자 수, 식재료 종류, 예산 등 요인들을 검토하여 운영이 필요하며, 이 사업이 지속성과 규칙성을 갖기 위해서는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memo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memo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memo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